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치학석사학위논문

한국 유권자의
정치 이념 분화에 관한 연구:
경제 정책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2015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성 예 진

한국 유권자의
정치 이념 분화에 관한 연구:
경제 정책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강 원 택

이 논문을 정치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성 예 진

성예진의 정치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8월

위원장 박 찬 욱 (인)

부위원장 강 원 택 (인)

위원 박 원 호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 유권자들이 가지는 상이한 정책영역 간 이념 선호의 분화에 정치적 정향과 사회경제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하였다. 대북안보정책에 관한 유권자들의 선호를 기준으로 두고 경제정책에 관한 이념 선호가 달라질 때 주관적 이념성향, 정당일체감, 그리고 사회경제적 특성으로서 소득수준, 연령, 교육수준이 두 정책영역 간 이념 선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2012년 대통령 선거 후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한국 유권자들의 이념 공간을 구성한 결과, 대북안보정책에서는 보수적 입장, 경제정책에서는 진보적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정책 영역 간 이념 선호가 비일관적인 집단이 뚜렷이 존재하고 있었고, 보수적인 대북안보정책 선호와 진보적인 경제정책 선호를 가진 집단이 유권자 중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정책영역 간 이념 선호의 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대북안보정책의 입장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주관적 이념성향, 정당일체감, 소득수준, 교육수준이 정책 간 이념 선호 분화의 여부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연령 변수의 영향력은 발견되지 않았다.

각 요인들의 영향력을 서로 통제했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요인은 계층변수인 소득수준이었다. 대북안보정책에서 보수적인 정책 선호를 가진 경우 소득 하층에서 진보적 경제정책 선호를 취할 가능성이 높으면서 정책이념 다변화를 이끌고 있었고, 대북안보정책에서 진보적 이념 선호를 가질 경우 경제정책에서 소득 하층과 상층의 이념 일관성이 두드러졌지만 소득 중간층이 경제정책에서 보수적 선호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대북안보정책에서 보수인 유권자들이 전체 유권자에게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했을 때 경제정책에 관한 소득 하층

과 소득 중층 이상의 이념이 대립할 가능성이 높았다.

연구 결과는 경제정책에서의 이념 갈등이 진행될 경우 한국 정치의 이념 갈등이 유권자들의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념선호 분화에 미치는 연령변수의 영향력이 미미했음을 고려했을 때, 새로운 쟁점 영역의 등장으로 인해 그동안 반공이데올로기 중심의 이념 대결 구도에서 중요했던 연령/세대 균열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소득 균열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이 보수 정책이나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계급 배반적’ 속성이 약화되고 계층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정책 선호가 형성됨으로써 한국 정치에서 계층 정치가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주요어 : 정치이념, 이념분화, 이념일관성, 정책선호, 경제정책, 계층균열
학 번 : 2013-22879

목 차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논문의 구성	6
II. 이론적 검토: 정치이념 논의 및 한국에서의 이념 갈등 ..7	
1. 정치이념의 개념과 정책선호 일관성의 평가	7
2. 정책선호와 이념 공간의 차원성	12
3. 한국정치에서의 정치이념 논의	17
1) 정치이념 논의의 등장	17
2) 다차원 정책갈등과 정치이념 논의	19
III. 상이한 정책영역 간 이념선호의 형성 요인	23
1. 주관적 이념성향과 정책선호	23
2. 정당일체감과 정책선호	27
3. 사회경제적 특성(연령, 소득, 교육수준)과 정책선호	30
1) 연령/세대 균열과 정책선호	31
2) 소득수준과 정책선호	31
3) 교육수준과 정책선호	33
IV. 연구가설 및 분석모형	35
1. 연구가설	35
1) 주관적 이념성향과 정책선호 분화	36

2) 정당일체감과 정책선호 분화	38
3)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책선호 분화	39
2. 분석모형의 구성	42
1) 분석 자료	42
2) 변수 조작 및 분석 방법	43
V. 정책선호의 이념적 분화와 그 요인 분석	45
1. 경제정책이념의 등장 배경과 그 영향	45
1)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경제정책의 이념갈등 심화	46
2) 경제정책을 둘러싼 정당 경쟁의 전개	50
2. 대북안보정책과 경제정책 간 선호의 이념적 분화	52
1) 대북안보정책과 경제정책 간 상관관계 분석	52
2) 대북안보정책과 경제정책 간 이념 선호의 분화	52
3. 정책선호의 이념적 분화의 요인 분석	59
1) 주관적 이념성향의 영향 분석	59
2) 정당일체감의 영향 분석	61
3) 사회경제적 특성의 영향 분석	64
4) 종합분석: 이념 분화 요인 분석의 최종 모형	70
VI. 결론 및 함의	76
참고문헌	81
Abstract	91

표 목 차

[표 1] 정책 선호의 이념 분화 요인 분석 모델	44
[표 2] 정책영역 간 이념 선호와 주관적이념성향과의 관계	53
[표 3] 대북안보정책과 경제정책에서의 이념선호 분화	55
[표 4] 정책영역 선호 별 이념 집단의 평균적 특성	57
[표 5] 주관적 이념성향과 정책영역 간 이념 분화	60
[표 6] 정당일체감과 정책영역 간 이념 분화	62
[표 7] 연령집단과 정책영역 간 이념 분화	65
[표 8] 소득수준과 정책영역 간 이념 분화	66
[표 9] 교육수준과 정책영역 간 이념 분화	68
[표 10] 이항로지스틱 분석기 대북안보정책과 경제정책이념 선호의 분화	72

그 립 목 차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정책이념 분화와 그 요인들	36
[그림 2] 2006-2014 상대적 빈곤율 추이	48
[그림 3] 2006-2014 5분위 배율	49

I. 서론

1. 문제제기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치이념(political ideology)이 주목받는 이유는 민주주의 원리의 규범적 지향점과 관련되어 있다. 정치이념은 정책들에 내포되어 있는 세계관, 또는 정책들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상을 나타내는 사고의 요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이념은 정책을 통해 주권자인 시민과 대표자인 정치인사이를 연계하는 매개체가 된다. 민주적 선거를 통해 창출된 정권은 집권 이후 각종 정책의 집행을 통해 다수 시민들의 이해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정치의 역할이 시민들의 이익 표출·집약·수렴에 있을 때, 정치이념은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미래를 전망하고자 하는 시민과 정치인 간의 연결고리가 된다.

한국정당정치에서 정치이념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였다. 권위주의 시대에 형성된 민주-반민주 구도가 1987년 민주화 이후 지역, 세대 등 다양한 정치균열로 등장하는 과정에서 이념균열 또한 함께 등장하였다. 제15대 대선부터 미약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던 이념 균열은(강원택 1998) 이후 다소 부침은 있었지만 정당 경쟁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주고 있다(박찬욱 외, 2008; 이갑윤 2011; 김윤실 윤종빈 2014). 이념, 지역, 세대 등 여러 균열들 간의 관계는 서로 배타적이고 경합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중첩적이고 공생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이는 양당제를 형성한 이분화된 정치세력 간의 경쟁을 더욱 굳건하고 첨예하게 만드는 원인이었다.

특히 한국사회의 이념 진영 간 대결을 촉발한 것은 김대중 정권의

전향적인 남북관계 조성 이후 촉발된 ‘남남갈등¹⁾’이었다. 남남갈등은 단순히 대북정책에 대한 찬반의 대립이 아니라 해방 이후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반공이념을 존속·폐기할 것인지를 둘러싼 가치관의 대립이었기 때문에(강원택 2005; 김갑식 2007) 공히 그 파급력이 크고 이후의 이념갈등에서 장기간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에 등장하여 일정 기간 지속된 기존의 이념대결과 최근의 대결구도는 그 내용과 양태가 변화한 듯 보인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해볼 수 있다. 첫째, 이념 대결 쟁점의 변화이다. 이념대결에서 반공이념에 관한 갈등이 주된 담론을 이루었던 예전과 달리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 개입이나 복지예산 확대 등 경제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정치경쟁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한국 정치의 이념 갈등에서 경제정책을 둘러싼 논의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쟁점이다. 국민소득의 향상과 산업 발전이 가져다 줄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s)를 기대했던 국민들이 신자유주의적 양극화와 경제위기심화를 겪으면서 재분배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대기업 위주의 산업 정책으로부터의 구조 개혁과 복지 확대에 대한 요구를 축적해왔으며,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2010년-2011년을 기점으로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의 민생이슈와 경제민주화 등의 개혁 이슈가 등장했던 것이다. 대북 정책과 반공주의를 둘러싼 정치적 쟁점이 주를 이루던 이전의 갈등 구도가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이념 대결 구도의 복잡성이다. 기존의 반공이념 정책영역에서의 이념 갈등은 진보 대 보수의 구도가 명확했다. 그런데 지난 제18대

1) 남남갈등이란 남북관계를 둘러싼 한국 사회 내부의 정치적 대립과 논쟁을 가리킨다. 남남갈등이라는 용어는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 언론에서 먼저 제기하였다. 그 이후 남남갈등은 일반적으로 김대중 정권에서 시행한 대북유화정책의 방향성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이념 갈등을 의미하게 되었다(김갑식 2007).

대선에서는 새로운 이념 구호가 등장했다. 실리주의, 중도주의라고도 불리는 이 구호는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와 같이 얼핏 보았을 때 기존의 이념적 관점에서 본다면 서로 상충되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을 위시한 보수 진영의 경우, 여전히 보수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러한 와중에서도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의제를 선점하는 등 경제정책에서 다양한 세력을 포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종합해보면 최근 나타난 이념 대결의 양상은 예전보다 더 복합적인 특성을 보인다. 이념갈등의 대상이 되는 정책 영역이 다변화되고 있고 그로 인해 여러 정책영역에 걸친 다양한 이념 선호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대북안보정책과 경제정책을 둘러싼 이념갈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진보-보수의 양극적 이념 경쟁으로 포괄할 수 없는 다차원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87년 체제’ 이후 형성된 진보 성향-진보적 정책 지지, 보수 성향-보수적 정책 지지의 이분화된 대결 구도가 대표하지 못 하는 새로운 갈등 구도가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념갈등의 다변화 과정, 즉 이념진영간의 이분화된 대립이 다양한 정책 영역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요인이 유권자의 정책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새롭게 대두되는 쟁점들에 대한 태도를 결정해야 할 때 기존의 이념 갈등을 구성하던 쟁점들에서 이미 가지고 있던 이념 태도가 새로운 쟁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대로 확장될 것이라 볼 수 없다. 유권자들은 새로운 쟁점에 대해 기존의 이념 태도와 같은 입장을 취할 수 있지만 반면 반대되는 입장을 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후에 등장한 쟁점이 기존에 주된 이념적 대척점을 구성했던 쟁점과 성격이 다르다면, 유권자들이 기존의 이념 태도를 유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념태도 결정과 관련된 유권자 행태에 관한 기존 연구에는 두 가지 상반되는 설명이 존재한다. 우선, 여러 정책 영역에 대해서 일관적인 이념태도를 강조하는 입장은 이념 태도가 상반되어 형성되는 것을 이념적 무지(ideological innocence)로 인한 결과라고 본다(Converse 1964; Kinder 1983). 그러나 유권자 이념공간의 다차원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비일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정책 태도가 이념적인 사고를 통해서도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정책영역에의 이념태도가 다른 정책영역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상황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Layman and Carsey 2002; Treier and Hillygus 2009; Feldman and Johnston 2014).

한국 유권자들의 정책이념에 관한 연구는 일차원적인 이념 공간 뿐 아니라 다차원적인 여러 정책 영역에 걸친 복합적 이념 선호의 발견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개별 정책들의 선호를 연결하는 이념 공간이 두 개 이상일 수 있으며 각각의 이념 공간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투표 선택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에 더해 다차원 정책 영역의 형성이 시기적으로 특수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통해 등장한 것이라 보고 있다. 이 때 먼저 등장한 이념 공간에서의 태도가 이후 등장한 이념 공간의 태도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이념의 분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여러 정책영역에서 나타나는 이념 선호의 분화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정향으로서 주관적 이념성향과 정당일체감의 영향력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각 정책영역의 성격과 연관 지어서 볼 때 정책선호의 기반이 되는 사회경제적 특성이 정책 선호 분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결과적으로 다차원 이념 공간에서 나타나는

정책이념 선호의 분화를 ‘이념적 무지’ 라기 보다는 보다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관련하여, 한국정치사적 특수한 맥락을 반영하는 반공이념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한국의 이념 갈등은 그동안 연령/세대 균열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만약 최근에 등장한 경제정책영역에서의 갈등이 기존의 갈등 구도와 중첩되어 벌어지고 있지 않다면,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소득과 같은 계층변수가 유권자들의 정책 태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던 계층균열과 같은 새로운 갈등의 영향력이 앞으로 부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논문의 구성

이 연구는 여러 정책에 걸쳐 복합적인 이념갈등의 발생 양태를 유권자들의 이념 태도가 분화되는 현상의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이론적 논의에서는 우선 이 논문에서 주목하는 이념과 정책선호의 관계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정책이념의 복합적 구도를 나타내는 이념 공간의 차원성에 관한 기존 논의 그리고 한국정치에 대한 이념 연구를 검토한다. 이후 정책 선호의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서 주관적 이념성향, 정당일체감, 연령, 소득, 교육수준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행한 후 연구의 가설을 제시할 것이다.

경험적 분석에서는 한국 정치에서 유권자들의 다차원적인 이념 공간이 형성되는 배경으로서 2000년대 중반 이후 경제환경의 변화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결과들을 살펴볼 것이다. 경제정책영역을 둘러싼 이념 갈등은 기존 이념 갈등의 주된 대상이었던 대북안보정책의 정치적 갈등과 구별되는데, 정책 영역들 간에 유권자들이 형성하는 이념적 선호가 서로 동일하지 않다면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대북안보정책에 대한 이념태도를 기준으로 유권자를 진보-보수 두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에서 유권자들이 경제정책에 대해 갖는 이념적 선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주관적 이념성향, 정당일체감, 사회경제적 특성(연령, 소득, 교육수준)에 따라 경제정책영역에서의 이념적 분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교차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각 요인을 포함한 다변수 최종모델을 이항로지분석을 통해 각 요인의 영향력을 평가할 것이다. 이후 연구의 정리와 함의를 논의하며 논문을 종합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검토: 정치이념논의 및 한국에서의 이념 갈등

1. 정치이념의 개념과 정책선택 일관성의 평가

정치이념은 정치학 텍스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논쟁적인 개념으로, 이념의 정의와 역할에 대한 완전한 합의는 아직까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Gerring 1997; Knight 2006). 그러나 유권자 행태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서 이념에 대한 정의는 주로 컨버스(Converse 1964)의 가치중립적 정의를 따르고 있다(Jost et al. 2009; 박원호 2012). 컨버스(Converse 1964, 206)는 이념을 ‘신념체계(belief system)’라고 부르면서 “생각과 태도의 배열형태로서 그 요소들이 제약 또는 기능적인 상호의존에 의해 서로 결속되어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념의 기능을 ‘특정 정치세력의 의도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면서 그 주제와 의도를 해석하고자 하는 비판이론 등과 비교해보면 컨버스의 정의는 측정과 평가를 위한 최소한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컨버스 등의 미시간 학파의 유권자 행태 연구에 영향을 준 다운즈(Downs)의 정의에서도 드러난다. 다만 다운즈(Downs 1957, 96)는 이념을 ‘좋은 사회에 대한 청사진 그리고 그 수단이 무엇인지 제시하는 언어적 이미지(verbal image)’라고 말하면서 정당과 유권자 사이에서 이념이 행하는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정책은 정치이념이 엮어내는 사고와 태도의 대상이자 정치과정에서 산출되는 실현물이자 결과물이다. 컨버스나 다운즈가 이념의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정부에 의해 시행되는 정책은 다양

한 대안들 간의 경쟁 끝에 채택된 것이다. 따라서 정책을 둘러싸고 정치세력 간의 대립과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당이 내세우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둘러싼 정책갈등은 단순히 개별 정책에 대한 찬반을 의미한다기보다 해당 정책을 고안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행위자들의 가치관 대립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념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이후의 한국 정치에서 이념갈등의 주축을 이루었던 소위 ‘남남갈등’은 대북정책에 대한 상이한 의견의 대립뿐 아니라 해방 이후 우리 정치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반공이념을 둘러싼 갈등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강원택 2005; 김갑식 2007).

이와 같이 정책 선호 형성에 상위 태도로서의 정치이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Peffley and Hurwitz 1985; 박경미·한정택·이지호 2012) 개별 정책에 대한 선호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념 갈등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정책에 대한 태도를 연관시키고 제약해내는 기저의 이념 공간을 구성해낸다면 유권자의 이념에 대한 관찰과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강원택 2005; 이현출 2005; 이갑윤·이현우 2008; 박원호 2012).

주지하듯이 각각의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는 완전히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형성된다. 이 연관성은 무엇이며,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가는 정치이념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핵심 질문이다. 컨버스가 구조적 신념 또는 신념체계에서 강조한 것은 여러 정책 쟁점들을 연결하는 체계적인 논리 또는 제약이었다. 제약의 수준이 높은 정책 선호를 가진 유권자는 정책 선호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이며 논리적이고 응집적이고 일관적이다(Converse 2000). 정책선호 간 내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는 고도의 추상화된 구조적 태도의 형성이 가능한 유권자이며, 이러한 유권자들만이 이념을 정치적 평가와 선택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컨버스의 주장이었다. 유권자들

이 추상적 사고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인지적 능력에 대한 측정과 평가에서 이견이 있긴 하지만 이념이 정책선호 간 ‘연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는 연구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있다.

이념 공간은 쟁점을 고도의 추상적 사고로 연결한 결과인 차원(dimension)으로 표현될 수 있었다. 정치적 대상에 대한 평가 기준, 즉 잣대(yardstick)로서의 이념성향은 양극적 이념 대립을 전제하는 진보-보수 축(liberal-conservative continuum)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전제되었는데, 이는 이념 공간이 일차원으로 구성되어있다고 보는 시각이었다. 구체적으로, 유권자가 새로운 쟁점과 맞닥뜨렸을 때 유권자는 장기적인 기억이자 사고방식으로서의 진보-보수 축에 의존하여 해당 쟁점을 해석하고 쟁점에 대한 정책선호를 결정하게 되며 그 선호는 이념 공간상의 한 점으로 표시될 수 있다. 컨버스와 같은 초기의 경험적 이념연구자들이 인지적 능력에 따라 유권자의 층위(strata)를 나눈 것은 이러한 이념 공간상의 위치에 정치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Converse 1964; Campbell, Converse, Miller & Donald 1960).

컨버스가 유권자 정책선호 또는 태도의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시도한 방법은 정책입장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컨버스는 일반대중 중 정책태도 간 일관된 방향성을 보이는 구조화된 의견을 가지는 유권자들이 아주 소수임을 발견하였다. 이로써 컨버스는 미국의 유권자들이 이념적으로 사고할 능력이 없다는 평가를 내리게 된다. 1960년대 미국 유권자들에 대한 이러한 컨버스의 평가는 유권자의 합리성을 전제하며 이루어지는 선거연구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정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었다. 대다수의 대중들이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사고를 하지 못 한다는 점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이며 합리적인 시민의 선택에 의해 운영되는 이상적인 민주주의 상과

한참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권자 행태에 관한 선구적 연구이자 고전이 된 『미국의 유권자(*The American Voter, Campbell et al. 1960*)』에서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의 안정성을 가져오는 기제로서 정서적 · 심리적 요인인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의 개념을 발전시키게 된 것은 유권자 행태에 대한 정치이념이 설명력 약화에 대한 대안적 시도였을 수 있다(박원호 2012). 대다수의 평범한 유권자들이 이념에 기초한 정치적 선택을 내릴 수 있을 만큼의 고도화된 인식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평가에 근거한 다운즈 식의 합리적 투표이론이 가지는 설명력이 약화되었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이 정당에 대한 오랜 지지라는 정서적 일체감에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을 것이라 본 것이다.

이렇게 컨버스를 비롯하여 일차원적 이념공간에서의 정책태도 일관성을 강조한 일련의 연구들은 다수 대중의 이념투표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쟁점에 대해 추상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 이념적 사고에서 중요하다는 논의는 학자들 사이에서 사실상 합의를 보이고 있다. 킨더(Kinder 1983)를 비롯한 학자들은 유권자의 정치적 사고가 이념에 의해 얼마나 체계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측정을 통해 유권자들이 이념적으로 무지하다(*innocence of ideology*)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Bishop 2005; Converse 2000).

그러나 체계적인 이념적 사고를 가지지 못한 일반 대중의 존재는 컨버스의 연구대상이었던 1960년대 미국의 문제이며(Nie and Anderson 1974), 이후 유권자 전반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정치인들의 이념대립이 격화되면서 일반 대중이 이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거나 정치적 사고와 선택에서 정책에 준거를 두는 성향이 높아졌다는 연구도 다수 발표되었다(Key 1966; Brody and Page 1972; Pierce 1970). 이후 정치이념의 차원성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면서

유권자의 인지적 능력과 신념 체계의 관계, 일관성을 형성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다.

2. 정책 선호와 이념공간의 차원성

정치이념이 정책의 선호를 형성하는 잣대로서 작동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선호의 축약이 진보 또는 보수의 이념적 성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가 취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념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영역이 하나 이상이기 때문에 상이한 정책 영역에서의 이념 선호가 축약되는 양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특히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념공간의 다차원성이다. 여러 정책 선호가 축약되는 이념 공간은 하나인가 또는 둘 이상인가? 개별 정책 영역에 대한 선호는 일차원의 이념 공간으로 축약되어 한 정책영역에서 나타나는 이념 갈등은 다른 정책영역과도 중첩되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정책 영역 내에 포함되는 개별 정책들 간 상호연관성을 지니며 나타나는 이념성향이 여러 차원에서 축약되어 공존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지금부터는 이념의 차원성에 대한 기존 논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상이한 정책 영역에 대한 선호가 단일한 진보-보수의 이념 차원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주장은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양극적인 이념 갈등이 논의되기 시작할 때부터 받아들여졌던 전통적인 시각이다(Arian and Shamir 1983; Jost et al. 2009). 앞에서 언급했듯이 컨버스와 캠벨 등의 미시간 학파의 연구 이후 진행된 이념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진보-보수 이념 공간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진보-보수 스펙트럼에 대한 강조는 여러 가지 정책 영역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를 이념 공간 내에 요약·축약할 수 있을 때 그 이념 공간이 일차원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가정이 깔려있다. 진보와 보수 성향을 양극으로 하는 이념공간이 유권자들의 축약된 정책선호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고 또 그러해야 한다는 컨버스 등의 논의는 이론적으로 간결하고(parsimony) 또 경험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어서 오랫동안 이용되어왔다(Jost et al. 2009, 312).

그러나 다수 연구자들은 일차원적인 이념 연속체가 유권자들의 이념 선호를 나타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념 공간은 적어도 이차원 이상의 다차원 공간으로 이루어져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진보적인 선호와 보수적인 선호가 서로 양극적인 연속선상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두 선호가 독립적인, 또는 성격이 다른 성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Conover and Feldman 1981; Kerlinger 1984). 이는 진보-보수 이념성향이 집단에 대한 상징적 선호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정책 선호와 구별된다는 논의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Ellis and Stimson 2012). 둘째, 교육수준 향상과 이슈 다면화 등의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여러 정책영역을 대변하는 다차원적인(multi-dimensional) 이념 공간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Luttbeg 1968; Inglehart 1984; Layman and Carsey 2002).

본 연구는 이 중 두 번째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진보-보수는 대립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정책선호가 모든 정책 영역에 있어서 양극적인 갈등 양상을 보이면서 일차원적으로 요약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념적으로 진보-보수의 대립 구도를 보이면서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지니는 정책 영역은 다양하며 각 정책영역에서의 이념 갈등이 반드시 하나의 커다란 대립구도로만 요약되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반 유권자에게서 이러한 이념공간의 다차원성이 중요하거나 또는 일관성 논의와 이념 다차원성의 논의를 절충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이념 공간의 양태가 나타난다는 논의가 있다.

루트벡(Luttbeg 1968, 399)이 지적하였듯이, 개별 정책 간 일관성 있는 태도를 형성하는 요인은 다양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믿음체계가 형성될 수 있으리라 생각해볼 수 있다. 각각의 믿음체계는 내적인 일관성을 보이고 있지만 믿음체계 간 일관성이 반드시 하나의 구심

점(centrality)을 부여하는 논리에 의해서 형성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복잡한 정치 현실을 반영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연구자들은 정치적인 변동의 결과로 현실이 더욱 복잡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잉글하트(Inglehart 1984)는 특히 세대 간 가치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젊은 세대들이 경제성장과 분배의 물질적 가치보다 여성, 인권, 환경 등의 탈물질적 가치를 발전시키고 있는 가치의 다면성을 주장하였는데, 이 배경으로서 산업사회의 발전과 그로 인한 풍요와 평화의 환경을 제시하였다. 미덴도르프(Middendorp 1992)나 키첼트(Kitschelt 2004)는 자유에 대한 이견을 반영하는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권위주의(authoritarian) 축이 전통적인 좌-우 선호와 함께 유권자들의 선호를 정렬시켜왔다고 보았는데, 키첼트는 기존의 전통적인 좌-우 균열보다 자유지상주의-권위주의 차원이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지거나 또는 기존의 균열을 대체하고 있다고 보았다.

정책영역에서의 이념다차원성을 분석한 논의에서, 주요한 이념갈등의 축을 담당했던 기존의 갈등이 새롭게 등장한 정책영역의 갈등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미국의 경우 1930년대 형성된 뉴딜연합을 약화 또는 해체시키는 새로운 이슈의 등장으로 인해 정당재편성(political realignment)이라는 정당체계의 질적 변화, 정당 지지집단의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Sundquist 1983; Carmines and Stimson 1989). 1960년대 이후 흑인인권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이 이전의 입장과는 다르게 흑인 인권 신장에 찬성하게 되면서 사회적 쟁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슈에 의한 정당 지지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었다.

그 외에도 동성애문제, 여성문제, 월남전 반대 등의 새로운 정책 이슈들이 미국 정치에 등장하여 새로운 균열선을 형성하고 있다는 논의들은 기존의 이념갈등이 새로운 이슈를 둘러싼 갈등을 완전히 대표해

내지 못함을 지적한다(Claggett and Shafer 1995; Layman and Carsey 2002; Carmines, Ensley and Wagner, 2012).

레이먼과 카시(Layman and Carsey 2002)는 엘리트 수준에서 다양한 정책 간 양극화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양극화가 유권자의 정책이념공간에서 유사하게 일어나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본다. 이들이 제시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사회복지, 인종, 문화적 이슈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시민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교차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둘째, 컨버스 류의 연구는 대중이 같은 정책영역 내의 정책 간 일관성이 낮다고 보고 있는데 상이한 정책 영역 간에 일관성은 더 낮을 것이라는 것, 셋째, 한 이슈에 대해 관심이 많은 ‘이슈대중(issue public)’이 다른 이슈영역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을 것이라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 넷째, 거의 대부분의 대중은 엘리트의 입장에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것, 이렇게 네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쟁점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은 진보-보수 일차원적인 이념 공간에서 새로운 쟁점입장이 기존의 쟁점입장을 대체하는 것(displacement)이 아니라 갈등을 확장(extension)시켜 새로운 이념 공간에서의 갈등을 만들어낸다고 보았다.

유권자의 이념태도에 관한 횡단면적 분석은 유권자의 이념 태도가 적어도 두 차원 이상의, 차원 내 응집성을 가지는 여러 차원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Luttbeg 1968; Conover and Feldman, 1981; Hinich and Munger 1994; 강원택 2005; 이현출 2005; 조성대 2008; Trier and Hillygus, 2009; 박원호 2012). 이는 각 차원을 구성하는 연결고리였던 논리적 사고체계가 하나 이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왜 경제정책에서의 이념갈등이 고스란히 사회정책의 영역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각각의 정책 영역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면 두 정책영역에 대한 태도 형성 요인 또한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지 갈등의 장이 되는 정책영역이 다를 뿐 아니라 특정한 정책적 영역에서 유권자들이 이념적 선호를 가지는 원인이 모든 유권자에게 같지 않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Jost 2006). 이는 이념이 여전히 다수 대중에게 중요하다는 두 번째 입장으로, 일차원적 이념공간과 다차원 이념 공간을 절충시키려는 시도와 맞닿아있다(Jost et al. 2009).

특히 스나이더만(Sniderman 1993)은 유권자의 이념적 무지에 대한 킨더의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보았다. 유권자들이 인지적 사고 능력과 정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라 이념적 사고를 하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유권자들의 이념적 무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보다는 정치적 정보의 수준에 따라 정책선호를 형성하는 요인이 달라진다는 평가가 더 합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유권자들의 이념 공간이 복합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일반 대중 다수의 정책 태도가 일차원적인 진보-보수 축으로 요약되지 않는다는 주장들은 이 연구에서의 시각과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다차원적인 유권자 이념의 특성을 수용하여 어떠한 이념 공간이 형성되고 있고 또 어떠한 것이 보다 중요한지, 그리고 다차원 이념 공간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3. 한국정치에서의 정치이념 논의

1) 정치 이념 논의의 등장

2000년대 초부터 한국 유권자들의 정치이념의 내용, 특성, 그리고 투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민주화 이후 정당정치의 지형을 결정하던 주된 요인이 지역균열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주요 정당은 지역이라는 이해관계가 뚜렷하지 않으며 오로지 권력 획득만을 추구하는 선거연합을 강화하고자 하였을 뿐(이갑윤 1998, 15) 정당 간 정책적 차별성은 사실상 부각되지 않았다. 정당 간 경쟁구도는 권위주의 시대의 민주-반민주 구도를 일정 정도 반영하는 지역 갈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을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2년 제16대 대선은 이념 균열이 부상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다. 우선 각 지역을 대표하던 3김 정치인들의 퇴장하고 이념적인 색채가 강한 노무현이라는 대선 후보가 등장하였다. 또한 김대중 정권이 시행한 대북정책과 당시 국민 다수의 반미감정을 자극하는 여러 사건들이 터지면서 반공이데올로기를 둘러싼 정책 갈등구조가 뚜렷해지기 시작했고 이념 갈등과 세대 갈등이 부상할 조건을 갖추게 된 것이다.

좌-우 또는 진보-보수라는 이념적인 대치관계가 의미하는 바는 국가 별로, 그리고 시기 별로 그 내용이 상이할 수 있음이 지적되어왔다(Klingemann 1979; Knutsen 1995). 세계사적인 보편성과 특수성의 차원에서 서구의 이념 갈등과 비교했을 때 한국정치의 이념갈등구조도 그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좌-우 또는 진보-보수라는 양극적 갈등 구조 하에서 벌어지는 정당 간 그리고 제 사회세력 간의 경쟁의 기반이

되는 사회균열은 국가 건설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역사적 사건들로 인해 형성된 갈등구조를 반영하게 된다(Lipset and Rokkan 1967). 한국의 이념갈등 또한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균열에 기초하여 경쟁과 협력의 배열이 결정되는데 바로 이러한 역사성으로 인해 한국 정치만의 특수성이 발현되는 것이다(강원택 2011).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이념갈등이 어떠한 정책 또는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는 좌-우 또는 진보-보수라는 이념이 무엇으로 구성되어있는지에 관한 질문들 그리고 그 중 어떠한 정책영역 또는 가치가 유권자들의 정당지지 및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의미를 가지는가에 관한 질문들에 관한 논의이다²⁾.

2) 한국 정치에서 진정한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이념이 존재하는가, 또는 한국의 정당체계에서 과연 진보세력이 유의미하게 대표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홍윤기(2002)는 일제 강점기부터 분단 이후 권위주의시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의 사상적 경직성으로 인해 한국 정치에는 진보-보수 담론이 아닌 ‘색깔론’만이 남았으며 정치담론은 권력의 쟁취와 생존의 연장이라는 목표 하에 논의되었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권력자들은 정치적으로 빈곤하며, 보수 세력은 지킬 것이 없고 진보세력은 전망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관점과 유사하게 강정인(1998)은 ‘한국에는 보수이념은 없고 보수 세력만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또한 이후의 연구에서 강정인(2009)은 민주화 이후 보수 세력이 개혁적인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정치적 경쟁 과정에서 재결집하여 시장경제와 엘리트식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면서 반공주의와 발전주의만을 내세웠던 과거보다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장집(2002)은 한국의 양당체계가 과거 이승만 세력과 한민당 세력의 대립적 경쟁을 기원으로 하는 ‘보수적 양당체계’라고 지칭하면서 양당 간 이념적 대결이 동일한 지평 하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위의 논의들은 권위주의 정권의 반공주의와 경제성장주의의 강조로 인해 건설적인 이념 담론이 침식되고 반대세력은 그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당의 선거강령분석을 통한 이지호의 연구(2009)에 따르면 비록 이념적 지평이 넓다고 할 순 없더라도 민주화 이후 정당들은 진보-보수 차원에서 서로의 차별성을 확대시켜왔다. 강원택(2012) 또한 3당 합당 이후 과거의 보수 세력을 넘어선 새로운 보수세력의 등장과 선거 경쟁에서의 진보 세력의 이념적 차별화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이원적 구도와 이념적 속성의 강화로 이어졌다고 보았다. IMF 경제위기와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이념 갈등의 계기

한국인의 투표행태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 유권자들의 이념 성향은 여야성향이라는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동조 여부 또는 정파적 지지와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졌다(이정복 1992). 제15대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나기 전 여야 교체에 대한 지지 여부는 폭넓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수용하느냐의 의미에서 변화/안정에 대한 찬반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야성향은 믿음체계라기 보다는 정서적 호불호의 성향으로 간주되었다(강원택 1998). 정책에 기초한 이념 연구는 1997년의 정권교체 이후 비로소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다차원 정책갈등과 정치이념 논의

한국 유권자들의 정책 이념에 관한 논의 또한 진보-보수 차원의 일차원적인 이념 갈등을 강조하는 연구와 이념 공간의 다차원성을 강조하는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컨버스의 일차원 이념 공간을 전제하는 경우 어떠한 개별 정책 또는 정책 영역이 연구 시기의 지배적인 갈등 요소인지 분석할 수 있다(윤성이 2006). 정책태도 전반의 일관성을 강조하는 이념 측정 방식 또한 일차원적 이념 공간을 상정하고 있다(이갑윤 이현우 2008; 류재성 2013). 한편 여러 정책 태도가 다차원적인 이념 공간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보면서 요인분석으로 정책 태도들을 연결하는 기저의 잠재적 차원을 발견하고자 시도하거나(김주찬 윤성이 2003; 이현출 2005; 박원호 2012) 정치맥락적인 차원에서 다차원적 이

를 강화시켰다(함재봉 2001, 17~18). 정책 경쟁의 정도와 내용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 민주화 이후 선거 경쟁의 공고화와 두 번의 정권교체의 경험은 주요 양당을 보수와 진보 세력의 대표로서 차별화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이념 경쟁의 내용도 과거에 비해 구체적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념 공간을 구성하여 각 정책영역에서 이념 갈등이 실재하느냐를 분석하는 시도가 존재했다(강원택 2005; 이현출 2005). 수리적인 공간모형을 구성하여 정책 갈등 구조를 파악해내고자 한 시도 또한 다차원적인 이념 공간을 상정하고 있다(조성대 2008; 박성복 2011).

특히 이념갈등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유권자들의 이념 공간이 이차원 이상의 다면화된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듯 보인다. 문제는 그 공간이 어떠한 정책 영역으로 이루어져있고 어떠한 정책 영역이 더 현저한 또는 지배적인 이념 갈등의 대상이 되느냐이다.

2000년대 초반 한국 정치에서 이념 균열이 주목받기 시작했을 때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은 한국 정치의 이념 갈등이 남북 관계와 관련된 남북 교류 정책, 대북 인도적 지원 정책 등 대북 정책을 주된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선우현 2002; 강원택 2005; 이현지 2003; 정진민 2003; 윤성이 2006). 이로 인해 반공이념, 북한에 대한 인식과 안보태도 등을 반영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개정과 한미동맹 유지 또는 강화, 전작권 환수 등에 대한 찬반 문제가 주된 이슈로 떠올랐다. 강원택(2003)은 반공이데올로기를 둘러싼 갈등이 발견되지만 경제적 가치를 둘러싼 갈등, 즉 분배, 시장, 규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았으며 이현지(2003)는 유권자들이 주관적 이념 성향을 결정할 때 대북문제와 안보문제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 두 사안에 관해 국회의원 수준에서 태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반면 복지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의 수준이 높지 않다고 보았다.

한편 다각적인 이념 갈등이 전개되고 있음을 지적한 연구들은 한국 정치의 이념 담론이 좀 더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기 시작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현출(2005)은 2002년과 2004년 유권자 이념 조사에서 국가보안법 개정, 대북지원 등을 포함한 냉전·권위주의 차원의 갈등이 여

전히 유효하지만 재벌개혁, 집단소송제 등을 포함한 신자유주의 차원과 복지정책을 둘러싼 갈등 또한 주요하다고 보았다. 이갑윤·이현우(2008)는 제17대 대선에서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친 이슈를 분석하면서 대북문제, 한미동맹문제 이외에 재벌 규제 완화와 경제성장 대 환경보호의 이슈가 후보선택에 영향을 주었음을 밝혔고, 박원호(2012)는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국가보안법, 한미FTA재체결 문제를 포함한 통치권/시민권 차원뿐 아니라 복지-성장,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경제-안정 차원이 유권자들의 이념 공간에 포함될 뿐 아니라 정당 투표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었다. 강원택(2010) 또한 제18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사이에 재벌문제뿐 아니라 폭넓은 경제정책 운용에 대한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의 공통점은 2000년대 후반 이후 경제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더 심화되어가고 있으며 그 정책 내용도 더 풍부해졌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조성대(2008)는 공간분석 방식을 통해 경제성장의 방법, 삶의 질, 개인권 등의 사회경제적 이슈들은 지역 갈등의 균열 구조와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이러한 이슈들이 활성화될 때 지역균열을 대체할 수 있는 정치균열이 형성될 것이며 한국 정당정치의 재정렬, 재구성까지도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민주화 이후의 열린 정치공간에서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이 뿌리가 깊고 오래 지속된 반공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가 점차 경제사회정책 등을 포함하며 다면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 이러한 현상들이 정치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념 갈등의 진행 과정은 한국 정치의 특수성을 배태시켰는데, 지역균열 이후 떠오르기 시작한 이념 갈등이 서구의 좌-우 갈등과 같은 소득, 직업 등의 계층 변수보다 연령/세대 특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강원택 2003; 박명호 2003). 이는 빠르게 변화해 온 한국 정치사에서 각 세대

별로 겪은 경험의 내용과 무게가 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양한 정책 쟁점들이 이념 갈등의 대상이 되고 상대적으로 이후에 등장한 여러 균열들로 인해 이러한 양상도 변화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단초는 새로운 정책의 등장으로 인해 형성되는 이념 대립의 구도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인지 검토함으로써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상이한 정책영역 간 이념선호의 형성 요인

앞의 논의에 비추어봤을 때 일반대중의 이념공간을 일차원 혹은 이차원 이상의 공간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유권자가 가지는 태도의 특성은 두 가지이다. 우선 유권자는 상이한 정책 영역 간에 일관된 이념선호를 가질 수 있다.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정책 영역 별로 일관되지 않은 선호를 가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는 왜 나타나는가? 즉, 유권자 태도의 일관성, 또는 제약을 가져다주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 논문에서는 정책선호에 대한 유권자의 이념적 경향성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주관적 이념성향과 정책선호

이 연구에서는 정책 이념과 주관적 이념성향을 서로 차별적인 개념으로 간주한다. 경험적 연구에서 유권자의 정치이념을 측정하는 방식은 주로 두 가지가 이용되고 있다. 자주 이용되는 방식은 진보-보수 양극적으로 0부터 10까지 표시하고 5를 중도로 한 일직선 위에서 응답자에게 자신의 이념위치가 어디인지 스스로 평가하게 하는(self-placement) 이념 측정 방식이다. 또한 정책이념은 여러 정책에 대한 찬반의 태도를 합산하여 측정할 수 있다. 주관적 이념성향이 유권자의 이념을 측정하는데 보다 직접적이라면 정책이념의 측정은 간접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주관적 이념성향의 측정을 통해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을 인지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시도, 즉 다운즈가 제시한 합리적 유권자의 이념 투표를 측정하고자 할 때는 주관적 이념성향이 나타내는 이념정향(ideological orientation)과 정책 위치 간의 논리적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 정책에 대한 찬반의 평가가 이념성향에 반영되어 있거나(Feldman and Conover 1981) 주관적 이념 성향이 구조적 태도로서 정책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Levitin and Miller 1979).

주관적 이념은 유권자의 이념 위치를 쉽게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고 자주 이용되는 척도이다. 반면 정책이념은 여러 개의 정책 문항을 고르는 것이 까다롭고 설문 조사 시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정책문항이 많을수록 유권자의 이념을 더 잘 측정할 수 있지만 문항 수를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Sullivan et al. 1978). 그래서 정책이념보다는 주관적 이념이 유권자 행태분석에 더 자주 이용되어 왔다.

하지만 주관적 이념성향이 정책 선호를 형성하는 체계적이고 인지적인 논리구조를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논의도 존재한다. 이는 주관적 이념성향이 과연 ‘무엇을 측정하는가’에 관한 문제로서, 유권자가 스스로 평가하는 진보-중도-보수 위치가 정책 태도 이외의 다양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으며 유권자마다 그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이념의 타당한 측정과 해석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관적 이념성향이 유권자의 정책태도를 나타내기에 다소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Arian and Shamir 1983; 윤성이 이민규 2011; 박원호 2012; 류재성 2013) 이는 주관적 이념성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심화된 연구가 필요함을 말해준다(박경미·한정택·이지호 2012). 주관적 이념성향은 정책과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지만 정책태도뿐 아니라 다른 많은 요소들을 함께 포함하여 측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책태도로 측정한 이념과는 분리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주관적 이념성향에게 영향을 주거나 주관적 이념으로 측정될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로 주로 지적되는 것은 정책선호 외에도 정파적 지지, 선호하는 후보자에 대한 호감의 정도, 그리고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가치, 집단 또는 정치세력에 대한 정서적(affective) 평가가 있다.

이내영 · 허석재(2010)는 쟁점투표가 지지하는 후보자의 입장에 의해 영향을 받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논의에서 주관적 이념성향이 응답자가 지지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이념 위치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유권자들이 설득효과 또는 투사 효과(Brody and Page 1972)가 주관적 이념성향에 반영되어 있음으로써 자신의 후보 선택을 합리화(rationalizing)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진보 또는 보수 정치세력에 대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정서적 평가가 주관적 이념에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Levitin and Miller 1979; Conover 1984; Feldman and Conover 1981; Jacoby 1991; 장승진 2013a). 펠드만과 콘오버(Feldman and Conover 1981)는 유권자들이 자신을 진보 또는 보수로서 자리매김할 때 진보 또는 보수적인 정치 세력에 대한 그룹 의식(group consciousness)이 반영되며 해당 그룹에 대한 평가를 통해 애착심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 외에도, 주관적 이념 평가는 이념의 측정 당시 부각되는(salient) 특정 정책에 대한 선호만을 반영하고 있을 수 있다. 또한 중간을 선호하는 응답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중도가 과대 대표될 수 있다는 측정 상의 한계도 가지고 있다(류재성 2013). 이러한 모든 논의들로 인해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와 관련된 이념성향을 나타내는데 있어 주관적 이념평가보다는 정책을 통한 간접 평가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이갑윤 이현우 2008; 박원호 2012; 류재성 2013). 이 논문도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관적 이념 성향은 정책 태도와 동일한 개념으로서 간주되지는 않지만 정책 태도를 형성할 때 유권자들에게 단서를 제공해 줄 가능성이 있다. 주관적 이념성향이 이념 성향을 결정하는 가치에 대한 태도, 즉 변화를 수용하는 정도나 국가개입에 대한 찬성의 정

도 등을 반영한다면 그러한 태도가 정책 선호의 방향성을 유도해낼 것이다. 또한 주관적 이념성향이 이념집단에 대한 감정적 선호를 나타낸다면, 자신이 속한다고 생각하는 이념 집단 또는 더 선호하는 이념 집단이 채택하고자 하는 정책 입장에 동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관적 이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파악하여 정책 선호에 이념이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한다면 정책 선호에서 나타나는 이념 갈등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이러한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질 것이다(Conover and Feldman 1981; 박경미·한정택·이지호 2012).

궁극적으로 이 연구의 관심은 주관적 이념성향이 정책영역간의 이념적 분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 이념성향이 가지는 정책 단서로서의 기능에 초점을 맞춘다. 응답자에 따라 주관적 이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를 수 있지만 이념성향은 기존에 존재하던 이념 갈등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으면서 유권자들에게 정책 판단의 단서가 될 수 있다. 주관적 이념성향이 강한 유권자일수록 기존의 이념 갈등 구도에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쟁점에 대한 태도도 기존의 이념 구도의 연장선상에서 사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연구는 주관적 이념성향과 정책이념 분화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정당일체감과 정책 선호

앞에서 지적한대로, 당파적(partisan) 요인으로서의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은 체계적인 이념성향에 따라 사고하지 않는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수로서 등장하였다. 정당일체감은 “정치적 대상에 대한 태도를 빚어내는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당파적 애착(partisan commitments) (Campbell et al. 1960, 135)” 으로 작동하여 유권자들은 자신이 일체감을 가지는 정당이 표명하는 입장에 따라 정책 선호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당일체감의 개념을 도입한 초기의 연구자들은 정당일체감이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형성되었으며 변화의 가능성이 극도로 낮은 애착심으로서 다른 어떤 정치적 태도보다 선행하며(131) 그의 정치적 정향과 맞지 않는 의견은 배제하도록 하는 인식의 선별기제(perceptual screen, 133)이라고 보았다. 정당일체감의 우위는 자칫하면 유권자들이 여러 정책 대안들 중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 입장에 찬성하고 이를 통해 정당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민주주의 성공의 전제조건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일 수 있었다.

이후 키(Key 1966, 6)가 정책과 정부운영평가 등에 합리적이고 반응적인 유권자들이 존재함을 강조하면서 “유권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라고 주장한 이후 정당일체감에 대한 수정주의적인 시각이 등장하였다. 피오리나(Fiorina 1981)는 정당일체감이 가진 정서적 요소와 ‘추동되지 않는 추동자(unmoved mover)’ 로서의 안정성에 대해 의문을 던지면서, 정부와 정당에 대한 회고적 평가의 총합(running tally)로서의 정당일체감의 특성을 이야기하였다. 페이지와 존스(Page and Jones 1979)는 정당이 내세운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정당일체감에 영향을 주

기도 하는 정당일체감과 정치적 대상간의 상호효과를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일련의 학자들은 정치적 쟁점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로서의 정당일체감의 역할이 유효함을 경험적으로 입증해왔다(Zaller 1992; Lewis-Beck, Jacoby, Norpoth, and Weisberg 2008; 김장수 2005; 박원호 2013).

정당일체감이 정책태도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해 인지심리학적인 시각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정보처리과정에서 정당일체감이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하였다. 펠드만과 콘오버(Feldman and Conover 1983)는 유권자들이 높은 정보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당에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보았다. 유권자들은 정당이라는 단서(partisan cue)를 통해 정당이 추진하는 정책과 유권자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 입장이 무엇인지 추론(inference)할 수 있다. 이로써 유권자들은 특정 정책이 무엇에 관한 것이며 어떠한 결과를 담보하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후 란(Rahn 1993)이나 로지와 해밀(Lodge and Hamill 1986)은 비슷한 논리로써 유권자들은 정당이 내놓은 정책 방향의 스테레오타입을 장기적 기억을 통해 형성하고 있으며 그 정당이 내세우는 정책 입장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결국 정책에 대한 찬/반 평가는 정당에 대한 호불호에 의해 갈리게 되며, 정당은 정책입장에 대한 인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Zaller 1992; Shafer and Clagget 1995; Carmines and Stimson 1989).

따라서 쟁점태도에 미칠 수 있는 정당일체감의 영향을 생각해보면 유권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전면에 내세우는 정책의 방향성과 세계관에 동조할 것이기 때문에 이념적 선호의 형성에도 정당일체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이념갈등에서 새로운 쟁점이 등장하였을 때 이전의 지배적인

이념 갈등에 의해 구조된 갈등 구조가 정당일체감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 정당 일체감이 유효한 단서로서 작용한다면 정당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대립 양태도 기존의 갈등과 유사하게 중첩되어 나타날 것이다. 레이먼과 카세이(Layman and Carsey 2002)는 미국 정치의 이념 양극화 현상과 관련하여 정당일체감의 영향력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정치 엘리트 수준에서 현저한 이념 양극화를 유권자들이 받아들이는 정도는 정당 일체감에 의해 결정되고 있었다. 정당일체감이 강한 유권자들이 그렇지 않은 유권자에 비해 정책 선호를 일차원의 양극화 수준으로 형성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레이먼과 카세이는 이러한 현상을 새로운 쟁점이 기존의 갈등을 대체(displacement)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갈등의 확장(extension)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3. 사회경제적 특성(연령, 소득, 교육수준)과 정책 선호

사회경제적 속성에 대한 분석은 유권자들이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면서 집단을 이루어 특정한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경제적 특성은 개인에게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동일한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끼리 교류하고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유사한 신념 또는 가치체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정치사회화라고 한다(임성학 2009). 각 집단은 집단 내 공유하는 정체성과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정책이 채택되고 실행되길 요구하게 되며, 집단 간 이해관계의 불일치는 정책 방향을 둘러싼 경쟁으로 점화하게 된다. 그러한 경쟁이 진보와 보수라는 양극적 양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구획된 집단이 정책 선호를 형성하면 사회균열이 형성되며, 그것이 정치적으로 표출될 때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정치균열이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박찬욱 외. 2008).

정책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성으로서 연령, 소득, 교육수준 세 가지 변수에 주목하고자 한다. 연령이 정치 성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를 연령 효과(aging effect)와 세대 효과(generation effect)로 구별하여 논의할 수 있다. 정책태도와 관련하여 연령 효과는 유권자들이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게 된다는 가설을 세우고 있다. 세대 효과는 시기에 따라 특정한 경험을 공유하는 유권자들 간에 독특한 정치사회적 태도를 공유한다고 본다.

1) 연령/세대 균열과 정책 선호

한국 유권자들 사이에서 세대 균열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제16대 대선 부터였다. 제16대 대선은 ‘세대전(war of generation)’ 이라 불릴 정도로(송호근 2003) 청년층과 장년층의 투표 행태가 차이를 보여 노무현 후보가 20대와 30대 연령층의 유권자, 특히 당시 소위 386 세대의 지지를 받아 당선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강원택 2003; 정구종 2006). 세대 변수는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구별될 수 있으며 특히 80년대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민주화 운동을 경험하고 민족주의 의식이 강했던 ‘386 세대’의 진보성이 확인되는 등 세대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강원택 2009; 노환희·송정민·강원택 2013). 그러나 ‘세대 효과’가 아니라 ‘연령 효과’에 주목하는 경우에도 정책태도와 관련하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각 태도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찬욱 외. 2008; 이내영 2010).

최근의 논의에서는 흥미로운 것은 20대 유권자들이 대북안보정책에서 50대 이상의 유권자들과 유사하게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근 지속되어왔던 경직된 남북관계와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3대 세습 등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게끔 하는 사건들이 20대의 정치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박원호 2012).

2) 계층 균열과 정책 선호

사회경제적 특성 중 두 번째로 검토할 것은 계층 또는 계급 변수로

서의 소득이다. 한국 정치의 이념 연구와 관련해서 계층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변수였는데, 이념 갈등이 주로 세대 요인과 주요하게 연계되어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는 한국 정치의 특수성으로서 저소득층이나 블루칼라 계층이 보수적 성향을 보이는 ‘계급 배반 현상’이 지적되었다(강원택 1998; 2003). 이러한 모습은 계급 균열이 주를 이루는 유럽 정치와는 대조적인 특성으로서 흥미롭다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정당정치의 전개로 인해 계층 변수가 관심 받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진보-보수 경쟁의 다차원성으로 인해 이념 쟁점이 경제정책으로 확산되면서 사회 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계층 변수에 주목하여 계층 균열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장승진(2013)은 주관적 계층의식이 제19대 총선과 제18대 대선의 정치적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용마(2014)는 직업, 소득, 학력 등의 변수를 종합하여 계층을 구분하였고 이를 통해 2000년대 실시된 선거에서 상층과 신중산층의 계층균열 현상을 확인하였다. 강원택(2013b)은 세대 균열과 계층 균열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정치 경쟁 양상에 주목하면서, 강한 보수성을 지닌 60대 이상 유권자를 제외했을 때 저소득층의 ‘계급 배반적’ 특성이 상당히 완화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손낙구(2010)는 서울 내 거주지역과 자산 소유 여부가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계층 균열이 한국 정치에서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단초를 발견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정책이 주된 이념 갈등의 장이 될 경우 한국에서도 계층에 따른 정당 경쟁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위의 연구들에서 계층 균열의 분석을 위해 중요한 것이 연구를 위한 계층의 정의와 구분임을 알 수 있었다. 유럽의 계급 정치와 같이

직업으로서 구분하는 계층은 한국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업이 하나의 계급으로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 고정적이고 배타적이지도 않지만 유사 직종이라 하더라도 고용 형태에 따라 임금이나 처우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강원택 2013b). 소득이나 직업과 같은 객관적 변수보다 주관적 계층의식이 정책태도 형성이나 정치적 선택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존재하지만(장승진 2013) 2000년대 중반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 원인으로 소득격차의 확대를 들 수 있는 만큼 가계소득 변수 또한 계층 변수로서 유의미하게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교육 수준과 정책 선호

유권자의 교육 수준은 정책 선호를 형성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과 관련 있는 변수이다. 컨버스를 비롯하여 이념 선호 형성에 관한 인지적 능력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정책들에 관해 진보와 보수의 갈등 구조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대중만이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논리 구조 하에 정책 태도를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Converse 1964; Jacoby 1986; 1995; Luskin 1987). 유권자가 정책의 내용과 정당 갈등 구조를 이해하고 여러 정책 간에 일관된 잣대를 적용하여 평가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이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인 정치적 세련도(political sophistication)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추상화 능력이 없는 유권자들은 정치와 관련이 없으면서도 획득하기 쉽고 언론 등을 통해 자주 부각되는 후보자의 카리스마와 같은 특성에 의존하여 정책 선호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Pierce 1993). 이러한 경우 정책 선호는 정책에 관한 올바른 이해보다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정치인들의 설득에 의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형성된 정책 선호

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대한 지각이나 정책 대안의 신중한 평가 등과는 거리가 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체계적인 정책 선호를 형성할 수 있으려면 정치경쟁과 정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야 하고 또한 그 정보를 조직하는 능력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한다(Luskin 1987). 유권자가 가지는 정치정보의 양과 그 능력을 측정하는 변수로서 교육 수준과 미디어 이용도 등 이용하거나 직접적으로 정치지식을 측정할 수 있다. 그 중 교육수준이 높은 유권자들은 그렇지 않은 유권자에 비해 상이한 정책 간 일관된 선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Barton and Parsons 1977). 교육수준은 정치지식 수준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유권자의 인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신뢰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있는 변수로 평가받고 있다(Delli Carpini and Keeter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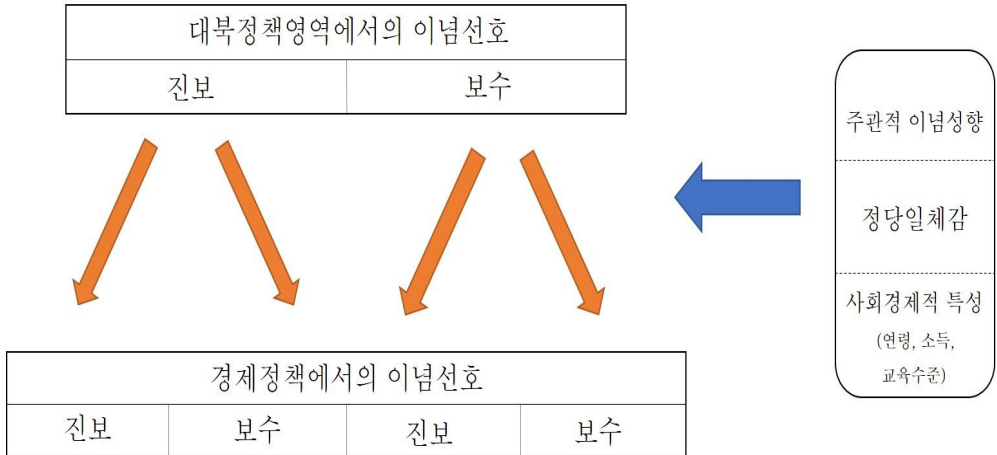
IV. 연구가설 및 분석모형

1. 연구가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은 서로 다른 정책영역 간 이념적 선호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된 정책 영역과 새로 등장한 정책영역 간 이념 선호의 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 유권자의 정책이념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여러 정책 태도의 기저에 놓인 다차원 이념 공간을 구성하고 그 이념 공간이 투표 등의 정치적 선택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그 동안 한국 정치의 이념 갈등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해오던 정치적 정책 갈등인 대북안보정책과 함께 경제정책영역 또한 유권자의 이념공간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대북안보정책-경제정책영역의 이차원적인 이념 공간에서 각 정책영역에 대한 이념 선호는 진보-보수 구조가 서로 완전히 중첩되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며 두 정책 영역 간 이념 선호의 분화가 나타나고 있을 것이다. 특히 선행해서 나타난 이념 갈등으로서의 대북안보정책에서 새로 등장한 쟁점을 포함하는 경제정책영역으로의 이념 분화가 나타날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정책영역 간 이념선호의 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앞서 검토한 주관적 이념성향, 정당일체감, 사회경제적 특성의 세 가지 요인 범주의 영향력을 검토할 것이다. 이념선호의 분화와 각 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정책이념 분화와 그 요인들



1) 주관적 이념성향과 정책선호 분화

정책 선호의 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인으로서의 주관적 이념성향은 특정 정책에 대한 찬반 태도를 결정하는 가치나 구조화된 이념적 태도 이외에도 유권자들이 스스로를 진보, 보수, 중도이념집단 중 어느 집단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소속의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집단정체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주관적 이념성향에는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선호,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집단이나 표상들에 대한 정서적 평가 등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검토한 기존의 경험적 연구에서는 이처럼 주관적 이념성향이 표명할 수 있는 복합적 속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 논문의 주된 관심은 주관적 이념성향의 내용보다 그 기능, 즉 유권자의 상이한 정책영역 간 선호를 연계할 수 있는 일관적인 이념 태도를 제공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이었다. 유권자가 자신을 진보라고 생각할 때 그 준거가 사회경제적 상황의 현상유지에 대한 태도였다면 그러한 태도가 정책 선호에 영향을 줄 것이다. 만약 주관적 이념성향이 진보-보수를 표방하는 집단에 대한 호감도를 의미한다면 정당을 포함한 이념 집단들이 내세우는 정책 방향에 대한 감정적 동조가 정책 선호에 반영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래 지속되어왔고 여전히 중요한 이념 갈등인 대북안보정책에 관한 선호는 주관적 이념성향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유권자들은 여러 종류의 강온 대북정책과 그 정책의 결과를 접하면서 상대적으로 익숙한 갈등에 자신의 성향을 투영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의 여러 이념 집단의 입장도 분명하게 차별되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경제정책태도의 형성에 주관적 이념 성향이 영향을 준다면 기존의 갈등에 대한 해석 기준이 동일하게 새로운 이념 쟁점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관적 이념성향의 영향력을 검토하면 기존의 이념 갈등 구도가 새로운 쟁점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신을 중도라도 지칭하는 유권자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을 진보 또는 보수라고 여기는 유권자들은 그러한 이념 성향에 걸맞은 정책 선호를 형성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설 1. 주관적 이념성향은 기존 정책과 새로운 정책 쟁점 간 이념적 선호 일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정당일체감과 정책선호 분화

기존 연구 검토에서 정당일체감은 ‘추동되지 않는 추동자’ 또는 ‘선택적 인식기제’로서 작동하며(Campbell et al. 1960) 유권자가 가깝게 여기는 정당의 입장에 따라 정책 쟁점의 입장을 유사하게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유권자들은 새로운 쟁점에 대한 정보비용을 줄이는 단서로서 정파적 지지를 이용할 수 있다(Zaller 1992).

따라서 정당일체감을 가진 유권자들은 새로운 쟁점에 대해서도 기존의 쟁점과 유사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정당일체감의 정서적 측면에 주목할 경우 귀속감을 가진 정당이 내세우는 정책 입장을 이념적으로 사고할 능력이 없는 유권자들이 지지 정당에 의해 설득된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당의 단서로서의 역할을 고려할 경우, 지지 정당이 제시하는 정책 프로그램의 지향성에 대한 이념적인 일치 또는 일치의 경험, 그리고 정당의 정책실행능력에 대한 신뢰 등 인지적인 요인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체에서 정당이 해야 할 역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정당의 명칭변경과 이합집산이 빈번히 일어나는 한국 정당의 상황에서 유권자의 정당 일체감이 강하게 형성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Dennis 1988).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는 정당의 존재 자체가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 했다. 그러나 ‘여야성향’ 그리고 정권교체 이후의 양당 체제의 지속으로 인해 일정한 강도의 정당일체감이 형성될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연구의 흐름이다(박찬욱 1993; 조중빈 1993; 이갑윤 2011; 박원호 2013). 한국 유권자들에게 정당일체감이 유효한 개념이라면 유권자들의 정책 태도 형성에도 정당의 설득 효과가

유의미하게 통할 것이다. 특히 민주화 이후 주요 양 당이 정책 입장의 차별화를 피해 왔다면 정책에 관한 양극적인 이념 분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대북안보정책에 대한 새누리당과 민주당 계열 정당의 입장은 뚜렷하게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경제정책 선호와 관련하여,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후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이 기존의 보수적 경제정책과는 다소 다른 진보적 의제인 ‘경제민주화’를 선점하였기 때문에 두 정당 간 입장이 모호해졌을 수 있고, 경제정책에 대해 정당이 주는 신호가 약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정당이 기존에 고수하던 이념적 입장이 세부적으로는 바뀌지 않았다고 인지했을 수 있다. 따라서 보수 정당은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의 최소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라는 보수적 선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진보 정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본다면, 정당일체감은 대북안보정책에 대한 기존의 대립 구조가 경제정책에서도 유지되는 것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정당 일체감을 통해 정당 입장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무당파 유권자들과 비교했을 때 정책 이념의 분화 정도는 낮을 것이라 볼 수 있다.

가설2. 정당일체감은 기존 정책과 새로운 정책 쟁점 간 이념적 선호 일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책선호 분화

유권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동일한 경험, 교류 등을 통해 공통의 이해관계를 만들어내고 정치균열로서 표출된다. 따라서 연령, 소득, 교육수준은 정치적 태도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이 연구의 관심이다.

그 동안 한국 정치의 특수성으로 지적되어왔던 것은 한국의 이념갈등은 소득, 직업과 같은 응답자가 속한 계층을 나타내는 변수보다 연령, 세대 요인과 관련을 맺고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수적 성향을 가지게 된다는 연령 효과의 영향도 있지만, 기존 이념갈등이 주로 반공이념과 관련된 정책 영역을 대립 배경으로 삼으면서 각 세대가 경험한 한국 정치의 역사적 경험의 차이가 이념 갈등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486 세대라 불리는 특정 세대의 경험이 특수하게 부각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연령/세대 변수는 그 중요성이 강해지고 있는 경제정책에 대한 태도 형성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반공이념의 유지와 존속을 둘러싼 갈등과 비교했을 때 경제정책에서도 유사한 연령집단 간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 볼 수 있을까? 2000년 중반 이후 발생한 경제 침체, 소득 불균형의 심화, 고용 문제 등이 연령집단 별로 상이한 경험을 만들어 냈다면 경제정책에 대한 태도에서 진보-보수의 구획화가 연령집단 별로 발생할 것이다. 대북안보정책에서 투영되었던 변화에 대한 태도, 국가개입 찬반에 대한 태도가 연령 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면 경제정책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대의 경제적 어려움과 50대-60대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게 다를 것인가? 질적인 측면에서 그 내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정책 방향에 대해 크게 이견을 만들어낼 정도로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가 다르리라고 보기 어렵

다.

계층 변수로서 그 동안 소득은 이념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미치더라도 저소득층이 보수적 이념 성향을 보이며 보수 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었다. 그러나 경제정책이 정치권의 주요 쟁점이 되면서 유권자들의 이념 태도에 계층 변수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소득 불균형의 심화로 인해 소득 계층 별 요구하는 경제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 기존에 대북안보정책에서 보수적 태도를 가진 유권자들이라 할지라도 경제정책에 대해선 소득 계층에 따라 진보적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수준이 유권자들의 이념 분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정치적 세련도에 따라 이념태도의 일관성 정도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입장을 논리적인 기준에 의해 체계적으로 구조화, 추상화할 수 있기 위해선 특정 수준의 인지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수준은 유권자의 인지적 능력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이다. 인지적 능력이 높은 유권자들에게 대북안보정책에서 가졌던 이념 선호의 기준이 체계적인 신념체제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면 상이한 정책영역 간 일관된 이념 선호를 가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3.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상이한 정책 영역 간 이념 분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분석모형의 구성

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유권자들의 정책이념 분화에 대한 분석을 위해 2012년 제 18대 대통령 선거를 사례로서 검토할 것이다. 제18대 대선 당시의 시기가 흥미로운 이유는 뚜렷한 제3후보가 결국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채로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명의 대통령 후보가 경쟁하게 된 선거였다는 점이다. 선거가 양극화된 이념집단 간의 ‘대결집’을 이룬 상태로 진행되면서 정책 쟁점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 형성에 있어서도 정당 요인이나 이념 요인이 동원되기 쉬운 선거였다.

그러나 상이한 정책 영역 간의 이념 갈등이 양극적으로 서로 증척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특히 이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대북안보정책과 경제정책 간 형성할 수 있는 이념 선호의 기초가 완전히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었다. 특히 경제정책에서 복지정책의 범위와 속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 성장과 불공정 거래구조 등이 주목받으면서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의제를 선점하고자 시도했던 노력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경제정책에서만큼은 기존의 진보-보수 구도가 유권자들의 이념 선호를 완전히 대표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가 대선 직후 실시한 “정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의식조사”이다. 본 조사는 2012년 12월 31일부터 2013년 1월 16일까지 진행되었고,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모집단으로 하여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을 통해 추출된 1,200명의 응답자에 대한 대면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2) 변수 조작 및 분석 방법

논문의 주요 관심인 정책선호에 근거한 유권자 이념의 측정을 위해 여섯 개의 정책질문을 이용하였다. 한 정책영역 당 세 개의 정책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응답자들의 정책 태도를 더하였다(정책 이념 = 정책선호 1 + 정책선호 2 + 정책선호 3).

구체적으로 대북안보정책영역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한미동맹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찬반 여부에 관한 유권자들의 정책 태도로 구성하였다. 경제정책영역은 경제성장보다 복지정책 확대, 공공기업 민영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자율 관리 강화에 대한 찬반 여부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정책 설문은 해당 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를 1. 매우 찬성 2. 대체로 찬성 3. 대체로 반대 4. 매우 반대로 묻고 있다. 이를 진보적 입장과 보수적 입장으로 분류하여, 각 질문이 모두 1,2 = 진보적 선호, 3,4 = 보수적 선호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역코딩하였다.

이렇게 구성한 두 가지 정책 영역의 입장은 수치가 높을수록 보수적 입장이 강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세 가지 정책 태도를 더하였을 때 3부터 12까지의 수치가 생기는데, 3부터 7까지를 진보, 8부터 12까지를 보수로 분류하였다. 상이한 정책 영역 간 이념이 일관된 집단과 비일관된 집단의 분석은 정책 이념의 선호를 교차하여 2x2의 공간을 구성하여 나타내었다. 대북안보정책에서의 진보-보수 태도와 경제정책에서의 진보-보수 이렇게 정책마다 두 가지 입장으로 분류하여 교차시킴으로써 네 가지 집단을 구성하였다.

대북안보정책과 경제정책에 관한 태도 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주관적 이념성향은 0-10의 척도를 세 가지로 나누어 0부터 4까지를 진보, 5를 중도, 6부터 10까지를 보수성향으로 조작하였다.

[표 1] 정책 선호의 이념 분화 요인 분석 모델

종속변수	대북안보 및 경제 정책태도	대북안보정책	북한 지원 확대 v. 확대 반대 한미동맹 강화 v. 강화 반대 국가보안법 존속 v. 폐지/개정
		경제정책	경제성장 v. 복지 확대 공공기업 민영화 v. 민영화 반대 비정규직 노동자 기업자율관리 v. 국가개입
		대북안보정책 이념 태도에 따라 분류 후 분류 후, 경제정책태도 진보:0, 보수:1	
독립변수	주관적 이념성향	0: 진보~5:중도~10:보수	
	정당일체감	새누리당 일체감	무당파, 민주통합당 지지=0, 약한 새누리당 지지 =1 강한 새누리당 지지 = 2
		민주통합당 일체감	무당파,새누리당 지지 = 0 민주통합당 지지 =1 강한 민주통합당 지지 =2
	사회경제적 특성	연령	19~29세=1, 30~39세=2, 40~49세=3, 50~59세=4, 60세 이상 = 5
		소득수준	1(하): 199만원 이하, 2(중하하): 200~299만원 3(중중하): 300~399만원 4(중): 400~499만원 5(중상): 500~599만원 6(상): 700만원 이상
교육수준		1: 중졸 이하, 2: 고졸 3: 대재 이상	

정당일체감의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대한 정당일체감 강도를 0, 1, 2로 조작하였다. “우리나라에 있는 정당 중 가깝게 느끼는 정

당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있다”고 답하여 바로 지지 정당을 선택한 경우를 ‘강한 일체감’으로, 그리고 ‘없다’고 응답한 이들 중 추가적으로 다시 지지 정당을 질문한 경우야 비로소 지지 정당을 선택한 경우를 ‘약한 일체감’으로 조작하였다.

연령 변수는 19세-29세, 30세-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계층 변수의 경우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시기와 가까운 2012년 3/4분기의 전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14만원 2천원이었던 것을 참고하여 계층 변수를 구성한 강원택(2013a)의 소득 계층 분류 방식에 조금의 변형을 가해 조작하였다. 원래의 계층 분류가 하-중하-중-중상-상의 다섯 가지 계층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면 이 연구에서는 중하를 두 집단으로 추가적으로 세분하였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소득에 기반을 두고 하(199만 원 이하) - 중하하(200~299만 원) - 중중하(300~399만원) - 중(400~499만원) - 중상(500~699만원) - 상(700만 원 이상)의 여섯 가지 집단으로 계층을 나누었다.

교육수준의 경우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의 세 가지 집단으로 조작화하였다.

V. 정책선택의 이념적 분화와 그 요인 분석

본격적인 분석에서 답하고자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념갈등 대상으로서의 경제정책영역의 부상과 관련한 질문이다. 현재 한국 정치의 이념갈등에서 경제정책영역이 주요한 쟁점으로서 편입된 배경은 무엇인가? 그러한 배경 사건의 결과로서 경제정책에서의 이념 갈등은 정치권과 유권자들 사이에서 주된 대립의 장이 되고 있는가? 기존의 이념갈등 축을 이루었던 대북안보정책영역과 비교했을 때 경제정책영역은 어떠한 특수성이 있는가?

둘째, 상이한 정책 영역 간의 이념 분화에 관련한 질문이다.

상이한 두 정책영역으로서 대북안보정책과 경제정책영역 간의 이념 분화는 일어나고 있는가? 이념 분화로 인해 형성되는 이념 집단 중 다수를 이루는 집단은 어디인가? 이념 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주관적 이념성향, 정당일체감, 사회경제적 변수의 영향은 나타나는가?

1. 경제정책이념의 등장 배경과 그 영향

한국에서의 정치이념 연구에 대한 문헌 검토에서 지적하였던 것처럼 2000년대 이념갈등의 지배적인 논쟁은 반공이념의 존속과 대북정책의 방향과 속도 등을 둘러싼 대북안보정책영역에서 일어났다. 남북관계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둘러싼 갈등은 ‘남남갈등’으로 불리는데, ‘한국현대사는 남남갈등의 역사(손호철 2011, 130)’라고 할 만큼 한국의 정치균열에 깊이 뿌리내린 굳건한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립셋과 록칸이 지적한 것처럼 각 사회에 존재하는 역사적 경험은 그 사회만의 특수한 사회 균열과 갈등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측면에서

(Lipset and Rokkan, 1967) 남남갈등은 서구의 이념갈등에는 존재하지 않는 한국 사회의 특수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남남갈등의 하위 의제로서의 다양한 정책에서의 이념갈등은 개별 정책을 둘러싼 대립이기보다 대북관계 등 한반도 분단에 의해 초래된 구조적 환경을 둘러싼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선우현, 2002; 이우영, 2003, 208; 강원택, 2005). 그 뿌리와 연원이 깊은 만큼 남남갈등을 둘러싼 진보-보수 균열은 이념갈등 및 정당체계의 형성과 정치적 담론을 지배해왔다. 한국에서 서구에서 보편적인 좌-우 갈등에서 유효한 계층 갈등보다 세대 갈등이 더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 것의 원인 중 하나도 대북안보정책을 둘러싼 이념갈등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박재홍 2010).

하지만 200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복지나 분배를 강조하는 경제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노인 수당 등 소득의 재분배와 민생 개선을 위한 복지 정책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나 문어발식 사업 확장 등이 바로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구조 개혁정책에 대한 찬반을 중심으로 경제적 갈등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변화, 정치균열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논의할 수 있다.

1)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경제정책의 이념 갈등 심화

복지 및 기업구조 정상화 등의 의제가 등장한 것의 배경에는 사회경제적 변화가 있었다. 여러 변화 중에서도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는 중산층의 감소와 상대적 박탈감 확대를 통한 사회적 협력

분위기의 악화 그리고 신빈곤층,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등의 근로빈곤층 문제 등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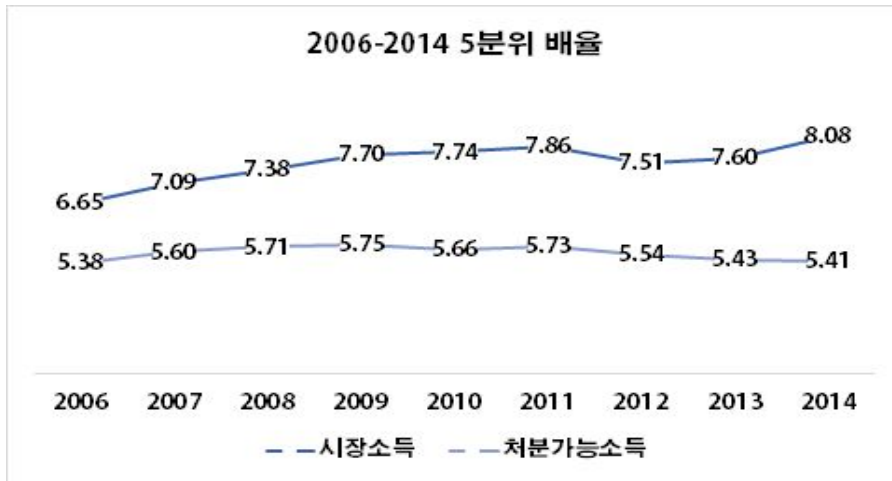
1970-80년대 중화학 공업화와 수출주도형 산업화로 인한 신중공업국으로의 도약은 고도의 경제성장과 두터운 중산층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 기업구조조정과 고용구조 악화로 인한 대규모 실업 등으로 인해 소득 격차가 급격히 벌어지게 되었는데, 두 차례의 상대적으로 진보 경향의 정권들은 경제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 했다. 이 결과가 2007년 이명박 정부의 등장이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이라는 소위 ‘747 공약’을 제시하였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CEO이미지’가 국민들에게 호소력을 지니면서 도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큰 득표 차로 이길 수 있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경제정책은 시장경제 활성화라는 신자유주의 기조 하에서 친기업적인 경제규제 완화와 FTA의 적극 추진 등의 성장위주 정책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부각되기 시작한 경제양극화와 관련된 쟁점들이

[그림 2] 2006-2014 상대적 빈곤율 추이



[그림 3] 2006-2014 5분위 배율



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다. 이명박 정권 시기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는 한국의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주었고 한국경제의 높은 무역의존도로 인해 경기침체가 심화되었다. 특히 한국의 소득 양극화와 관련해서, 2006년 이후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의 비율인 ‘상대적빈곤율’ 및 5분위계층(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1분위 계층(최하위 20%)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인 ‘소득5분위 배율’이 그 이후 전반적으로 악화되어 왔다(그림 2, 그림 3).

이러한 소득분배지표의 악화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강화하고 주관적 계층 의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13년 객관적 지표를 통해 중산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이 지난 30년간 꾸준히 유지되거나 증가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여기는 사람이 40%도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는 경제 성장의 결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실망하는 경향이 높으며 성장보다 분배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재

열 2015).

2) 경제정책을 둘러싼 정당 경쟁의 전개

특히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경제상황뿐 아니라 정책이념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원 2012). 민주당은 정강 정책에서 “무분별한 세계화와 시장만능주의를 극복” 할 것이라 선언하면서 경제정책에서의 쟁점 갈등의 기점을 열었다. 정당의 정책 강조와 관련해서 이지호(2009)는 주요 정당의 강령분석을 통해 정당의 이념적 위치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에 따르면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에서 정당이 강조한 정책 범주는 정치적 사안으로 ‘민주주의’, ‘정치부패’와 같은 것이었으나 2007년 대선과 2008년 선거에서는 ‘복지확대’와 ‘소수자보호’ 등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에 관한 구호가 강조되고 있다. 특히 2007-2008년의 정당강령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복지 확대 그리고 지속성장을 위한 기술과 인프라에 관한 것이었다(이지호 2009, 129). 이러한 분석은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경제정책을 둘러싼 정당 간 정책 갈등, 나아가 이념 갈등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경제정책에서의 갈등은 2008년 이후 정당 정치의 중심을 이루었다. 2010년 무상급식을 둘러싼 쟁점이 처음 등장한 이후 반값등록금, 노인 복지 수당 지급 문제 등 복지정책의 확대와 증세를 둘러싼 논쟁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개선, 대형마트 규제 등 경제민주화 논의가 제도권 정치 차원에서 지속되고 있다.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경제정책에서 보수적 기초를 유지하고자 했던 보수 정당의 노선이 유권자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후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거쳐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이 진보

의제에 가까운 경제 민주화 의제를 선점하면서 주요 정당 간 정책 입장이 유사해지는 듯 보였다. 그러나 보수 정당이 중도에 가깝게 정책 입장을 변경하고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진보-보수 정당 간의 정책 차이점이 세부적 차원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보수 세력이 주장해오던 경제성장 노선, 친기업적인 성향 등에 대한 선호가 유권자들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강우진 2013).

중요한 것은 복지정책, 노동 정책 등을 둘러싼 경제정책에서의 이념 갈등이 선거의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배경이 되었던 사회경제적 환경이 유지되거나 심화된다면 경제정책 갈등이 기존의 대북안보정책을 둘러싼 반공이데올로기 갈등만큼이나 강한 파급력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경제정책에 대한 선호를 기존의 이념 선호와 다르게 형성함으로써 다차원적 이념 경쟁을 이끌어가는 집단이 어떻게 분화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상이한 정책 영역 간 이념 분화의 요인

1) 대북안보정책과 경제정책 간 상관관계 분석

앞선 논의에서는 한국 정치에서 대북포용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지배적이었던 이념적 대립구도가 경제정책영역의 중요성 증가로 인해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을 검토하였다. 즉, 200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경제구조의 변화가 국민들의 복지 수준과 기업 구조의 개선에 대한 문제제기를 확산시켰으며, 새롭게 주목받게 된 이슈들이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이념대결의 장으로서 경제정책영역의 위상을 높이게 되었음을 보였다.

그렇다면 경제정책의 실행방향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기존에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던 선호와 중첩되어 나타나는가? 바꿔 말하면, 경제정책에 관한 유권자들의 정책이념 선호는 기존의 대북안보정책에 대한 선호와 서로 구별되는 차원에서 형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상이한 두 정책 영역에서의 갈등이 완전히 중첩되어있지 않다면, 어느 정도로 두 선호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선 각 정책 영역에서 유권자들의 이념 선호가 얼마나 유사하게 분포해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북안보정책과 경제정책 태도 간 피어슨 상관계수를 도출하였다.

대북안보정책과 경제정책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대북안보정책과 경제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념적 선호는 서로 동일한 진보-보수 방향성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상관관계의 강도 측면에서 서로 약한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두 정책 영역에 대한 유권자 태도의 유사

[표 2] 정책영역 간 이념선호와 주관적 이념성향과의 관계

	1	2	3
1. 대북안보정책	1		
2. 경제정책	0.11***	1	
3. 주관적 이념성향	0.29***	0.12***	1

성이 높은 수준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즉, 두 정책영역에서의 정책 선호를 연계하는 성향이나 가치 구조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단일한 잣대로써 유권자들의 상이한 정책 선호를 온전히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대북안보정책과 경제정책 간의 피어슨상관계수는 0.11이었다(표 2). 두 정책 영역은 완전히 직교의 관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정책영역에서의 태도로 다른 정책영역의 태도를 예측하는 것의 정확도가 높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대북안보정책과 경제정책의 유권자 태도가 서로 분리되어 논의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주관적 이념 성향을 통해서 각 정책영역의 선호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주관적 이념성향과 두 정책 영역에서의 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두 정책영역 모두 주관적 이념성향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강한 상관관계는 아니었다. 즉, 주관적 이념성향은 정책쟁점들을 통해 구성해 낸 정책이념공간과 완전히 구별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주관적 이념성향이 정책이념을 제약하는 단차원의 이념공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었다.

두 정책영역을 비교할 경우, 주관적 이념성향과 경제정책태도 간의 상관관계수는 0.12이며 대북안보정책과의 상관관계수는 약 0.29로 나타나서 대북안보정책의 경우가 경제정책의 경우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

고 있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이념 갈등구조에 영향을 주어왔던 대북안보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가 그들이 스스로 규정한 이념적 정체성에 더 강하게 편입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주관적 이념성향은 새로운 쟁점보다는 기존의 쟁점을 둘러싼 갈등을 보여주기엔 적합한 지표인 것으로 보인다.

2) 대북안보정책과 경제정책 간 이념 선호의 분화

이제 유권자들의 정책태도 간 이념선호의 분화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북정책영역을 기준으로 경제정책영역에서의 이념선호를 나타내보고자 한다. 즉, 대북정책영역에서 진보적 입장을 가질 때와 보수적 입장을 가질 때로 나누어서 생기는 두 가지 이념 집단 사이에서 경제정책에 관한 이념 선호가 어떻게 분화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대북안보정책과 경제정책과 관련된 각각 세 개의 정책 문항을 사용하여 두 정책 영역의 이념을 구성하였고, 각 정책영역에 대한 태도를 진보-보수로 양분하여 대북안보정책과 경제정책에서 진보-진보, 진보-보수, 보수-진보, 보수-보수의 네 가지 집단이 형성되었음을 앞에서 이야기한 바 있다.

분류 결과,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북안보정책에서 진보인 유권자인 311명 중 41.16%는 경제정책에서도 동일한 이념 태도를 보이고 있어 두 정책영역 간 이념선호가 일치하는 집단을 구성하고 있었다. 한편 58.8%의 유권자들은 경제정책영역에서 보수적 선호를 보이고 있어 일관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대북안보정책에서 보수인 유권자인 871명 중 59.9%의 유권자들이 경제정책에서 진보적 선호를 형성

하고 있었고, 40%의 유권자들이 보수적 선호를 형성하고 있어서 두 정책영역 간 일관적인 선호보다 비일관적인 이념선호를 가진 유권자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안보정책과 경제정책의 상이한 정책영역 간 이념집단의 구성은 이념적으로 비일관적인 집단의 존재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앞서 시행한 상관관계분석의 결과에서처럼 기존에 존재하던 이념 갈등으로서의 대북안보정책과 새롭게 등장한 쟁점인 경제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는 완전히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지 않았고, 이는 유권자 이념공간의 다면성 또는 복잡성을 보여주고 있다. 적어도 2012년의 시점에서 유권자의 정치이념 지형은 진보-보수의 일차원적인 이념갈등구조로 단순히 나타낼 수 없는 다차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표3>의 이념집단의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북안보정책영역에서는 진보보다 보수가 우세했고(진보:보수 = 26.43 : 73.57) 경제정책영역에서는 보수보다 진보적 입장이 우세했다(진보:보수 = 59.70 : 40.30). 대북유화정책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는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 과반수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국가보안법, 한미동맹에 대한 입장 등을

[표 3] 대북안보정책과 경제정책에서의 이념선호 분화

		경제정책에서의 이념 선호		총합(명, %)
대북안보정책 에서의 이념선호	진보	진보	183 (41.16)	311 (100)
		보수	128 (58.84)	
	보수	진보	522 (59.93)	871 (100)
		보수	349 (40.07)	

결정하는 반공이념의 존속과 유지에 대한 찬반 등에 대해서도 다수가 현상유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북안보정책영역에서 유권자들의 보수적인 성향이 강함을 알 수 있었다.

경제정책영역에서 진보적 입장의 우세는 대북안보정책영역만큼 뚜렷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현저하다고 할 수 있었다. 경제정책영역에서의 이념 선호가 재분배 정책의 확대와 기업 간 불공정 구조의 개선 그리고 불안정한 고용구조의 개혁 등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개입에 대한 찬반을 의미한다면 60%의 유권자들이 개입적인 경제정책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네 가지 이념집단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집단은 대북안보정책에서는 보수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경제정책에서는 진보적 선호를 보이는 집단이었다. 동일하게 비일관적인 선호를 보인다 하더라도 대북안보정책에서 진보적 태도를 보이면서 경제정책에서 보수적 태도를 보이는 유권자 집단은 네 집단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이념 집단은 평균적으로 어떠한 정치적 정향과 사회경제적 특성을 가진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가? <표4>는 각 집단 유권자들의 평균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대북안보정책에 대한 태도가 유권자들의 정치적 정향에 강한 영향력을 주고 있으며 여전히 주된 이념적 갈등의 장으로 존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북안보정책에서 보수적인 유권자들은 진보적인 유권자들에 비해 주관적 이념 성향의 평균이 더 보수적이었고, 새누리당 일체감이 강했으며 민주통합당에 대한 일체감이 약했다. 사회경제적 특성에 있어서 연령 평균은 더 높았고 교육수준 평균은 낮았다. 한편 이러한 분석은 정치적 정향이 경제정책에 대한 선호를 말해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소득과 교육수준이 정치적 정향과 연령보다 경제정책 선호를

[표 4] 정책영역 선호 별 이념 집단의 평균적 특성

대북 안보	경제	주관적 이념성향	새누리당 일체감	민주당 일체감	연령	소득	교육수준
보수	진보	5.41	0.46	0.20	3.12	2.99	2.28
	보수	5.56	0.50	0.21	3.18	3.29	2.33
진보	진보	4.28	0.13	0.50	2.68	3.40	2.60
	보수	4.80	0.28	0.35	2.75	3.17	2.39

주관적 이념성향 0: 진보 ~ 10: 보수

새누리당 일체감 0: 일체감 없음, 1: 일체감 있음

민주통합당 일체감 0: 일체감 없음, 1: 일체감 있음

연령 1: 19~29세, 2: 30~39세, 3: 40~49세, 4: 50~59세, 5: 60세 이상

교육수준 1: 중졸 이하, 2: 고졸, 3: 대재 이상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2000년대 후반 유권자들의 주관적 이념성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권자들이 보수화되었음을 지적하였다(이내영 2009; 김윤실·윤종빈 2014). 분석 결과 유권자 이념의 보수화라는 결론은 주관적 이념 성향과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대북안보정책영역에서의 이념 태도의 변화에는 부합할 수 있지만 경제정책영역에서의 유권자 진보화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 하고 있다.

또한 집단 간 비율 차이를 함께 고려하면 왜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이 대북안보정책에서 강경보수를 유지하면서 경제정책에서 진보적 의제를 표방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 정당이 유권자들의 이념적 분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할 때 접전이 예상되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새누리당은 경제정책에서의 진보 집단을 동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누리당의 진보적 경제정책

의 의제 선점은 성장주의 경제정책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경제민주화 의제를 선점하여 경제정책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을 중도에 가깝도록 만들고 민주통합당과의 정책적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안보정책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보수 집단의 지지를 최대한 동원하면서 그 중에서 경제정책영역에서 진보인 사람들의 지지 이탈을 막고자 한 것이다.

3. 정책선호의 이념적 분화의 요인 분석

이제부터는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정책이념공간에서 일관적인 이념 선호와 비일관적인 이념 선호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검토할 것이다. 세 가지 요인으로서 유권자의 주관적 이념 성향, 정당일체감, 그리고 사회경제적 특성에 주목한다.

1) 주관적 이념성향의 영향력 분석

우선 유권자가 상이한 정책영역 간 일관된 이념선호를 형성하는데 주관적 이념 성향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가설 1에서는 주관적 이념성향이 각각의 방향에 일치하는 정책영역 간의 일관성을 형성하는데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 보았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주관적 이념 성향에 따라 유권자들의 정책선호 분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표5>은 유권자들의 주관적 이념 성향에 따른 정책선호 분화의 교차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 결과 대북안보정책에서 보수적인 선호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 집단 내에서 주관적 이념 성향에 따라 각 이념 집단의 분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p=0.12$). 그러나 주관적 이념과 정책 선호의 대략적 경향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을 진보로 생각하는 유권자들 중에서 진보적인 경제정책을 선호하는 유권자들이 많았고, 자신을 보수로 생각하는 유권자들 중에서 보수적인 경제정책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다. 이는 주관적 이념성향이 대북안보정책과 경제정책 간 이념 선호의 일관성을 유인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 주관적 이념성향과 정책영역 간 이념 분화

이념 경제 정책태도	대북안보정책태도 보수			대북안보정책태도 진보		
	진보	보수	총합	진보	보수	총합
진보	56.25	43.75	176 (100)	73.87	26.13	111 (100)
중도	64.55	35.45	330 (100)	61.47	38.53	109 (100)
보수	41.72	58.28	326 (100)	46.81	53.19	47 (100)
	chi2(2) = 4.25	Pr = 0.12		chi2(2) = 7.33	Pr = 0.02	
	Cramers' V = 0.07			Cramers' V = 0.17		

주관적 이념의 분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대북안보정책에서 보수적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자신을 중도에 위치시킨 사람들 중 경제정책에서는 진보적 선호를 가진 유권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중도유권자들 중 대북안보정책에서 보수이면서 진보적인 경제정책에 찬성하는 유권자들이 64.5%를 차지하여 중도 중 이념적으로 일관된 태도를 가진 집단의 거의 두 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류재성(2012)에 따르면, 한국의 중도 유권자들은 이념적으로 무정향(non-attitudes) 또는 비결정의 특징을 지니며 이것이 정치 및 정당에 대한 부정적 태도이기 보다는 중립적 태도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았다. 이들은 진보나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 집단, 또는 가치를 옹호하지 않으면서 정책이념에서도 일관된 선호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정치체제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 집단 또는 부동층(swing voters)일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앞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대북안보정책태도에서 진보인 유권자들에게 주관적 이념성향은 경제정책태도를 형성하는 것에 상대적으로 더 강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분석에서 각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포되어 있었고($p=0.02$) 변수 간 상관관계의 수준을 보여주는 크레이머 브이의 수치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V=0.17$). 대북안보정책에서 진보인 유권자의 경우 주관적 이념 성향으로서의 진보 성향은 경제정책의 태도를 유도하는데 더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상이한 두 정책영역 사이의 이념 선호 일관성을 추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점은 유권자들의 정책 이념 분화에 주관적 정치 이념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지만, 그 영향력이 대북안보정책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강한 반공이념을 가진 유권자들의 경우 그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유권자들에 비해 주관적 이념성향의 영향력이 약하게 나타났으며 부동층의 가능성을 보이는 유권자 비율도 더 높았다. 상대적으로 대북안보정책에서 진보적 태도를 가진 유권자들이 주관적 이념성향으로서의 진보 성향에 잘 연계되어 있고 이로 인해 일관적 정책 선호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정당일체감의 영향력 분석

정당에 대해 가지는 애착심은 상이한 정책 간 이념선호의 분화에 유효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 유권자들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입장에 따라 정책 쟁점에 대한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정당을 쟁점 판단의 단서로 삼는다면 정당일체감은 이념 집단의 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유력한 요인이 될 것이다. 각 정당에 대한 일체감이 강할수록 그 정당이 표방하는 이념적 정책 방향을 따라 쟁점태도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교차분석 결과 정당일체감의 강도에 따라 나타나는 이념 집단 간의

비율은 그 차이가 크다고 할 순 없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정당일체감과 각 집단 소속의 상관관계도 다른 요인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높았다(대북안보정책 입장에 따라 보수-진보 각각 $p=0.07 / V=0.10$, $p=0.00 / V=0.25$). 무당파와 비교했을 때 민주통합당보다는 새누리당의 경우가 경제정책에 대한 선호를 더 효과적으로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2가 타당함을 보여준다.

<표6>은 유권자가 새누리당 일체감과 민주통합당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각 집단의 비율이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대북안보정책에서 보수적 입장을 보이고 있을 때 새누리당에 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들은 무당파에서 경제적 보수 입장을 가진 경우보다 더 높은 비율의 유권자들을 보수 입장으로 동원해내고 있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지자들 중에서 경제정책에서 진보적 선호를 가진 유권자들이 많은 것은 흥미로운 부분이었다. 이는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경제정책에서 이념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정책을 제시해야 했던

[표 6] 정당일체감과 정책영역 간 이념 분화

경제정책 태도	대북안보정책태도 보수			대북안보정책태도 진보		
	진보	보수	총합	진보	보수	총합
민주통합 당 일체감	57.92	42.08	183 (100)	65.93	34.07	135 (100)
무당파	65.47	34.53	278 (100)	63.96	36.04	111 (100)
새누리당 일체감	57.07	42.93	410 (100)	35.38	64.62	65 (100)
	chi2(2) = 5.25 Pr = 0.07			chi2(2) = 18.76 Pr = 0.00		
	Cramers' V = 0.10			Cramers' V = 0.25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북안보정책에서 진보적 입장을 가진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당일체감의 영향력은 어떻게 나타날까? 대북안보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유화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정당이 쟁점 평가의 단서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누리당 일체감은 유권자들의 경제정책 선호를 강력하게 추동하고 있었다. <표6>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통합당에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의 65.9%가 경제정책태도에서 진보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새누리당에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 중 64.6%가 경제정책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두 정당 모두 무당파와 비교했을 때 각자의 정당이 표방하는 이념 이미지에 맞는 경제정책태도로 유권자들의 태도를 유인하고 있었다.

무당파 유권자들이 대북안보정책에 대한 태도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진보적인 경제정책에 찬성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에서의 주관적 이념성향과 유사하게 대북안보정책에서는 보수적 선호를 보이면서 경제정책에서는 진보인 비일관적인 정책 선호를 가진 유권자들이 무당파 집단 중 65.5% 를 차지하고 있었다. 류재성(2012)에 따르면 한국의 무당파 유권자들은 비결정, 비태도보다는 기존 정체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가지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선호가 비일관적이면서도 지지하는 정당을 가지고 있을 경우는 정당일체감을 통해 투표를 비롯한 정치 참여에 적극적인 유권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무당파이면서 정책에 대한 이념적 선호가 서로 상충될 경우는 부정적 태도가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정치에 대한 소외감과 무관심이 높아지고 부동층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정당일체감 수준에서 나타난 이념집단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정당일체감은 일관된 이념 선호를 형성하는데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관적 이념성향의 영향력과 비슷하게 대북안보정책에서 진보인 유권자들에게 정당일체감이 더 강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경제적 특성의 영향력 분석

(1) 연령과 이념 분화

지금부터는 가설3과 관련, 유권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정책 태도가 분화되고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우선 연령의 영향력을 알아보자.

<표7>은 연령과 이념 분화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특정 연령 집단에 속한다고 해서 대북안보정책과 경제정책 간 상이한 태도가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연령집단을 통틀어 경제정책에서 보수적 입장보다는 진보적 입장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고 따라서 연령 변수가 정책영역 간 분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일 가능성은 낮았다.

흥미로운 것은 대북안보정책이 보수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19-29세 유권자들과 50대 이상 유권자들의 이념 분화 정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20대의 경우 대북안보정책에서 보수적 선호를 가지고 있더라도 경제정책영역에서 진보적 입장을 가지는 유권자들이 대다수였다. 최근 20대 유권자들의 보수화, 특히 대북안보정책에서의 보수화가 발견되는 경향이다(박원호 2012). 그러나 경제정책영역에서는 진보적 성향을 가진 유권자 비율이 훨씬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60대 이상의 연령집단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

다. 한국 정치에서 일반적으로 50-60대 유권자들은 강한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특히 안보정책태도에 있어서 고연령층은 가장 강경한 보수 집단으로 유지되어 왔었다. 그러나 북한과 안보 문제에서 보수적 입장을 고수하는 60대 이상의 유권자들 중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진보적 태도를 보이는 비율이 60% 이상이었다.

대북안보정책에서 진보적 태도를 보이는 응답자들 사이에서 연령 별로 일관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0-60대의 경우 경제정책에서 보수적인 선호를 보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진보 성향을 견지하고 있는 유권자들이 다수였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연령은 유권자들의 이념 분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경제정책 쟁점이 지금보다 더 부각되

[표 7] 연령집단과 정책영역 간 이념 분화

연령	대북안보정책 보수			대북안보정책 진보		
	진보	보수	총합	진보	보수	총합
19-29세	69.29	30.71	140 (100)	58.67	41.33	75 (100)
30대	56.73	43.27	171 (100)	60.87	39.13	69 (100)
40대	57.30	42.70	185 (100)	62.34	37.66	77 (100)
50대	56.74	43.26	178 (100)	54.35	45.65	46 (100)
60대 이상	61.42	34.58	197 (100)	54.55	45.45	44 (100)
	chi2(4) = 7.30 Pr = 0.12			chi2(4) = 1.23 Pr = 0.87		

어 정치적 갈등에서 그 중요성이 커질 경우 연령/세대 균열은 예전보다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 소득수준과 이념 분화

그렇다면 유권자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책영역 간 이념 분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 <표8>은 다소 복잡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소득 전반에 걸쳐 유권자들이 진보적 경제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대북안보정책에서의 보수적 성향을 가진 유권자 집단은 경제정책태

[표 8] 소득수준과 정책영역 간 이념 분화

소득	대북안보정책 보수			대북안보정책 진보		
	진보	보수	n	진보	보수	n
경제 정책						
하	68.87	31.13	151 (100)	70.27	29.73	37 (100)
중하하	66.88	33.12	154 (100)	46.55	53.45	58 (100)
중중하	53.57	46.43	224 (100)	51.72	48.28	87 (100)
중	57.30	42.70	178 (100)	57.63	42.37	59 (100)
중상	59.20	40.80	125 (100)	70.00	30.00	50 (100)
상	48.65	51.35	37 (100)	77.78	22.22	18 (100)
	chi2(5) = 14.40 Pr = 0.01			chi2(4) = 12.67 Pr = 0.02		
	Cramers' V = 0.13			Cramers' V = 0.20		

도에서 전반적으로 일관된 보수적 성향보다 진보적 태도를 가진 유권자들이 더 많았지만 소득에 따라 그 분화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소득계층 하층과 중하층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경제정책에서의 진보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면서 상이한 정책 간 이념 분화에 소득이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었다. 대북안보정책에서 보수적 태도를 보이는 유권자들 중에서 소득 하층의 경우 68.9%의 유권자가, 중하하층의 경우 66.9%의 유권자가 진보적 성향을 보여 그보다 높은 소득 계층의 유권자들에 비해 현저히 진보적 경향이 강했다. 대북안보정책에서 보수적 정책을 옹호하더라도 소득이 아주 낮은 경우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진보적 태도를 보이는 복합적 성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대북안보정책에서 진보적 경향을 보이는 유권자의 경우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진보 성향의 일관성이 나타나는 경우는 소득 하위층과 상위층으로, 두 집단의 성향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다. 반면 소득 중하하위층의 경우 오히려 경제정책에서의 보수성을 보여주는 유권자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보적인 대북정책을 표방하는 유권자들 중 상위 소득 계층에 속할 경우 여전히 진보적 경제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중상층과 소득 상층에 속한 유권자들이 소득 하층에 속하는 유권자들과 비교했을 때 경제정책에서 진보적 성향이 강한 것은 흥미로운 지점이었다. 이들은 소득 수준이 높으면서 정책이념에서 강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이었는데, 이들의 진보 성향은 이용마(2014)가 지적한 신중산층의 진보화와 일치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경제정책의 경우 정책 실행으로 획득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계층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중하위층 이하의 유권자들에게 진보적인 경제정책, 즉 복지를 증대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 등에 국가

가 개입하는 것이 더 이해관계에 부합할 수 있다. 그 동안 소득을 포함한 계층 변수는 유권자들의 이념 선호 형성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거나 저소득층이 더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특성이 있었다. 그러나 본 결과는 경제정책을 둘러싼 경쟁의 내용이 더욱 부각된다면 소득에 따라 소득 하위층의 정책태도 분화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3) 교육수준과 이념 분화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의 교육수준이 이념의 분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표9>는 대북안보정책의 성향에 따라 교육 수준의 영향력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북안보정책에서 보수적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의 경우, 고졸 이상의 유권자들에게 이념 성향의 일관성이 더 두드러지고 있었다. 중졸 이하

[표 9] 교육수준과 정책영역 간 이념 분화

교육수준	대북안보정책 보수			대북안보정책 진보		
	진보	보수	총합	진보	보수	총합
중졸이하	63.40	36.60	153 (100)	50.00	50.00	32 (100)
고졸	41.67	58.33	300 (100)	48.28	51.72	87 (100)
대재이상	39.42	60.58	411 (100)	65.26	34.74	190 (100)
	chi2(2) = 1.11 Pr = 0.57			chi2(2) = 8.28 Pr = 0.01		
	Cramers' V = 0.04			Cramers' V = 0.16		

유권자들의 경우 경제정책에서 진보적 성향을 보이는 유권자들이 60% 이상이었지만 고졸 이상은 대북안보정책과 유사한 이념 선호를 경제정책에서도 보이고 있는 유권자들이 약 60%에 달했다. 카이스퀘어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고졸 이상의 유권자들에게서 일관성이 높은 경향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대북안보정책에서 진보적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까지는 경제정책에서의 진보-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각 집단 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유권자들의 경우 두 정책 영역에서 상이한 선호를 가진 경우보다 일관된 이념 선호를 표출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유권자들이 50:50 정도의 경제정책 선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대학교 졸업자 이상은 65%가 대북안보정책과 동일한 진보적 선호를 경제정책에서도 내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유권자들에게 대북안보정책과 경제정책이 서로 구별되는 상이한 정책으로서 존재하는 와중에서도 인지적 능력이 높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두 정책 간 선호가 중첩되는 경향이 높음을 보여준다. 인지적 능력이 높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반공이념을 둘러싼 찬반 논쟁에서 보수적 태도를 형성할 경우 동일한 잣대가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이들이 여러 정책에 대한 의견을 추상성이 높은 구조적 태도로서 제약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수의 정책 간 상관관계의 분석이나 주관적 이념 성향을 정책 간 제약을 부여하는 추상적 사고의 기제로 보고 그와의 정합성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정책태도 간 일관성의 정도가 낮고 정합성이 낮은 유권자들이 이념적으로 무지하다고 보고 있다(Converse 1964; 1975; Kinder 1983; Jacoby 1985; 1988). 그러나 앞서 여러 정치적 속성과 다른 사회경제적 속성이 이념 분화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두 개

의 정책영역 간 일관된 선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외의 유권자들이 개념화 수준이 높은 이념적 사고를 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측면을 유권자들이 정책태도를 정치적으로 의미 있게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로 평가를 연결할 순 없을 것 같다. 특히 경제정책에 대한 태도의 형성에서 소득의 영향력이 발견되기 시작했다면 실행될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일정 정도의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 종합분석: 이념 분화 요인 분석의 최종 모형

이제까지 대북안보정책과 경제정책 간 유권자 이념 선호의 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교차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앞에서 개별적인 변수가 이념 분화에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각각 검토했다면 지금부터는 각 변수들을 서로 통제했을 때 어떤 요인이 유권자들의 이념 분화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표10>은 앞에서 살펴 본 정책 간 이념 분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 포함된 최종 모형이다. 종속 변수는 경제정책에 대한 선호로, 최종 모형은 유권자가 경제정책에서 보수적 선호를 보일 가능성에 각 변수가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가능성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는 상이한 정책 영역 간 선호의 이념적 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선 주관적 이념성향의 영향을 살펴보면, 중도 유권자와 비교했을 때 자신을 보수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경제정책 선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신을 진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은 중도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보다 주관적 이

념성향이 경제정책의 선호 형성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유권자의 진보 성향이 정책선호 분화에 미치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경제정책에서 진보적인 방향의 선호를 형성할 확률을 높인다고 볼 수 없었다. 대북안보정책에서 어떠한 이념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경제정책 선호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북안보정책에서 각 집단에 속하는 유권자들 중 자신을 중도라고 평가한 유권자들의 전반적인 성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북안보정책에서 보수인 유권자들의 경우 오히려 진보인 유권자들이 중도인 유권자들에 비해 경제정책에서 보수적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석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대북안보정책에서 보수인 유권자들 중 자신을 중도라고 평가한 유권자들이 진보 유권자들보다 더 진보적인 경제정책 선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표5>의 주관적 이념성향과 경제정책 이념 분화의 교차분석표에서 대북정책에서 보수인 유권자들 중 자신을 중도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대북안보정책에서 진보인 경우보다 훨씬 많았다. 그리고 이들 중 진보적 경제정책태도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이 주관적 이념성향이 진보인 유권자들보다 더 많게 나타났던 것이다. 이는 대북안보정책에서 보수적 태도를 가지는 유권자들 중 자신을 중도에 위치시키는 유권자들이 정책 간 강한 교차 압력을 느끼면서 중도 입장에 일체감을 느꼈을 가능성을 말해 준다. 또한 이는 대북안보정책에서 보수적 입장을 가지는 경우가 진보적 선호를 가지는 경우보다 대북안보정책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대북안보정책에서 진보적인 선호를 가진 유권자들에게 주관적 이념 성향에서 진보 집단에 일체감을 가지는 경우 중도 유권자들에 비해 경제정책에서 보수적 선호를 가질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었다. 이 경우는

[표 10] 이항로지스틱 분석: 대북안보정책과 경제정책 이념 선호의 분화

		대북안보정책 보수: 경제정책 진보 v. 보수			대북안보정책 진보: 경제정책 진보 v. 보수		
종속변수: 경제정책태도 보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한계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한계효과		
이념	진보	0.39 *	0.20	0.09	-0.59 *	0.32	-0.13
	보수	0.14	0.18	0.03	-0.15	0.42	-0.03
정당 일체감	약한 민주당 일체감	-0.02	0.31	-0.00	-0.37	0.47	-0.07
	강한 민주당 일체감	0.26	0.24	-0.06	-0.25	0.36	-0.05
	약한 새누리당 일체감	-0.25	0.31	-0.05	0.91	0.71	0.21
	강한 새누리당 일체감	0.39 **	0.19	0.09	0.79 *	0.45	0.18
연령	30-39세	0.42 *	0.25	0.10	-0.11	0.41	-0.02
	40-49세	0.36	0.25	0.09	-0.44	0.41	-0.09
	50-59세	0.40	0.27	0.10	-0.32	0.49	-0.06
	60세 이상	0.47	0.31	0.11	-0.45	0.65	-0.09
소득 수준	중하하	0.10	0.27	0.03	1.30 **	0.61	0.30
	중중하	0.72 **	0.26	0.18	1.21 **	0.60	0.28
	중	0.53 *	0.28	0.13	1.33 **	0.63	0.31
	중상	0.54 *	0.30	0.13	0.48	0.68	0.11
	상	1.00 **	0.41	0.24	0.45	0.82	0.11
교육 수준	고졸	0.15	0.27	0.03	-0.56	0.59	-0.11
	대졸	0.10	0.29	0.02	-1.10 *	0.62	-0.25
상수		-1.64	0.37		-0.29	0.83	
		사례 수 = 825 Log likelihood = -537.05 Pseudo R2= 0.03			사례 수 = 264 Log likelihood = -155.34 Pseudo R2= 0.09		

**p<0.05, *p<0.10

종속변수: 경제정책선호 진보: 0. 보수: 1

각 범주 별 변수는 이항 변수로 조작되었다.

각각의 범주 변수에서 분석의 비교 베이스는 다음과 같다.

- 1) 주관적 이념 성향: 중도
- 2) 정당일체감: 무당파
- 3) 연령: 19-29세
- 4) 소득: 하
- 5) 교육수준: 중졸 이하

주관적 이념 성향이 예상되는 방향으로 유권자들의 경제정책 선호를 유도하고 있었다. 진보 유권자들은 주관적 이념 성향이 없거나 약한 중도 유권자들에 비해 경제정책에서 대북안보정책과 이념 분화를 보일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었다.

그 다음 정당일체감도 유권자의 정책이념 분화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에 대한 일체감이 아니라 새누리당에 대한 일체감이 이념 분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지적해야겠다. 대북안보정책에서 보수적 성향을 보이는 유권자들 중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강한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 경제정책에서 보수적 성향을 보였고, 대북안보정책에서 진보적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새누리당 일체감이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 영향력의 정도는 대북안보정책에서 진보적 성향을 보이는 유권자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대북안보정책에서 보수인 유권자들보다 진보인 유권자들에게서 새누리당의 동원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경제정책에서 새누리당이 민주당 계열보다 상대적으로 더 뚜렷한 단서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앞으로 경제정책방향을 둘러싼 이념 갈등이 지금보다 더 부각되었을 때 새누리당이 유권자들을 설득하는데 더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말해준다. 한편 그만큼 무당파층은 상이한 정책 영역 간 일관된 이념 선호를 가지기보다 상대적으로 더 다차원적인 갈등 구조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계층 변수인 소득수준의 경우 소득 하층을 기준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가계소득으로 측정된 계층 집단 중 어디에 속하는지가 이념의 분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았다. 대북안보정책에서 보수 입장을 가진 유권자들 사이에서 진보적인 경제정책 선호를 가지는데 소득 변수가 미치는 한계효과는 다른 변수들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층에 비해 중중하층, 중층, 중상층, 상층은 경제정책에서도

보수일 확률이 18%p, 13%p, 13%p, 2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유권자가 그렇지 않은 유권자에 비해 대북정책에서 보수적 입장을 가지면서도 경제정책에서는 진보적 선호를 가지는 다차원적 이념 경쟁의 주인공일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대북안보정책에서 진보적 입장을 가진 유권자들의 경우 소득 하층보다 높은 소득 계층에 속할 때 보수적 입장을 가질 확률이 높아지고 있었으며 그 한계효과도 약 30%p 정도로 매우 높았다. 소득 하층의 유권자들이 중층의 유권자들에 비해 일관된 진보적 정책이념을 가질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것이다. 대북안보정책에서 진보적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이 소득 중층인 경우 경제정책에서의 상이한 이념 선호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았다.

소득 변수가 정책이념에 미치는 영향력의 분석은 경제정책영역에 대한 태도에서 저소득층이 진보적 선호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이 정치적으로 더 보수적이었다는 과거의 경향(김재한 1999; 강원택 2003, 107)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특히 대북안보정책에서 보수성을 보이는 유권자들이 유권자 전체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을 고려할 때 진보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저소득층 유권자들의 요구가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최종 모형에서 교육수준 변수는 전반적으로 유권자들의 이념 분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대북안보정책에서 진보적 태도를 가진 유권자들에게만 대학교 졸업 이상의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책 선호의 일관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 경우 다른 변수들에 비해 한계효과가 크게 나타나(30%p) 이들 사이에서는 두 정책영역 간의 이념 갈등이 복합적인 차원보다는 서로 중첩되어 양극적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북안보정책에서 보수인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교육수준이 정책이념 분화 여

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정리하면, 대북안보정책과 경제정책 간 선호가 일관된 진보-보수 성향을 갖도록 하는데 있어 주관적 이념 성향 중 진보, 새누리당 정당일체감, 소득수준, 교육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주관적 이념성향이 중도이거나 무당파, 중졸 이하의 유권자들의 경우 정책영역 간 비일관적인 이념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이는 대북안보정책에서의 이념 입장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했다. 대북안보정책에서 진보적 선호를 보이는 유권자들에게는 각 요인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여 무당파의 경우 강한 새누리당 일체감을 가진 유권자들보다 일관된 정책 선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대북안보정책과 경제정책 간의 복합적 이념 선호를 형성하는데 주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득수준이었다. 소득수준은 정당일체감과 유사한 방향으로 정책 선호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소득수준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진보적인 정책에 찬성하는 유권자 집단 중 그 태도가 강한 집단은 대북안보정책에서 보수적 태도를 가진 하층 집단과 중하하 집단, 대북안보정책에서 진보적 태도를 가진 하층 집단 그리고 상층 집단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발견은 전반적으로 경제정책이 합의이슈의 성격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서도 경제정책의 속도에 관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소득 하층과 중상층 간의 대립이 특히 대북안보정책에서 보수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6장 결론 및 함의

이 연구는 한국 정치의 진보-보수 이념 대립이 다양한 정책 영역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갖게 되는 정책영역 간 이념 선호의 분화에 주목하여, 정치적 요인과 여러 사회경제적 특성 중에서 어떠한 요인이 이념 분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가 이차원 이상의 이념 공간으로 요약될 때 여러 정책 간 이념 선호가 중첩되지 않도록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적절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념 갈등이 다차원적 공간에서 진행되는 것은 새로운 쟁점의 등장 때문이었다. 기존에 한국 정치에서 이념 갈등의 주된 축을 구성했던 정책 영역은 대북안보정책영역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심화된 경제적 양극화와 세계금융위기,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의 강화 등으로 인해 경제정책을 둘러싼 이념 갈등이 부상하게 되었다. 그 결과 복지문제와 경제민주화가 2012년 두 차례의 선거에서 주요 의제가 되기에 이르렀다.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정책영역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다차원적인 이념 갈등은 ‘전통적인’ 진보 대 보수의 양극적인 갈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대립 구도 하에서 벌어지고 있다. ‘안보에서는 보수, 경제에서는 진보’ 등 이념 갈등의 일차원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서로 상충되는 정책 선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컨버스(Converse)로 대표되는 연구자들은 이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유권자들이라면 정책들 간 선호를 하나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잣대로 결속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따라서 이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유권자들의 경우 한 정책 영역의 태도가 다른 정책 영역의 태도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며, 이러한 정책 간 이념 선호의 일관성은 정치적 세련도

가 높을수록 더 분명히 드러난다고 보았다. 그러나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진보-보수 대립 구도가 나타나면서 한 정책 영역에서의 태도가 다른 정책 영역을 반드시 반영하고 있지 않게 되었으며, 그러한 정책 영역 간의 이념 선호의 불일치를 유권자의 이념적 무지로 볼 것이 아니라 적절하고 합리적인 요인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상이한 정책 영역 간 이념 선호의 분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검토를 위해 각 정책 영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대북안보정책에 관한 유권자들의 선호를 기준으로 두고 경제정책에 관한 이념 선호가 달라지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검토한 요인은 유권자의 정치적인 정향으로서 주관적 이념 성향과 정당일체감, 사회경제적 특성으로서 가계 소득, 연령, 교육수준, 총 다섯 가지 요인이었다. 대북안보정책의 경우 대북 지원 확대, 한미 동맹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반영하고 있고 경제정책의 경우 복지확대, 비정규직 기업 자율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반영하여 구성하였다.

유권자 이념 공간의 구성 결과, 대북안보정책에서는 보수적 입장, 경제정책에서는 진보적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정책 영역 간 이념 선호가 비일관적인 집단이 뚜렷이 존재하고 있었고, 보수적인 대북안보정책 선호와 진보적인 경제정책 선호를 가진 집단이 유권자 중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상이한 정책영역 간 이념 분화의 요인과 경제정책 선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자신을 진보로 생각하는 유권자들 중 진보적인 경제정책을 선호하는 유권자들이 많았고, 자신을 보수로 생각하는 유권자들 중 보수적인 경제정책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중도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책 간 비일관적인 이념 선호를 가지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대북안보정책에서 보수적인 유권자들보다 진보적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주관적 이념 성향의 영향력이 더 강했다.

정당일체감은 대북안보정책과 경제정책 간 일관된 선호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대북안보정책태도에서 보수인 유권자들은 새누리당에게 일체감을 가졌어도 진보적 경제태도를 가진 경우가 많았다. 대북안보정책태도에서 진보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당일체감이 경제정책에서도 진보적 선호를 가지는데 더 강한 영향력을 주고 있었다.

사회경제적 특성의 경우, 특정 연령 집단에 속하는 것이 대북안보정책과 경제정책의 이념 선호 일치 여부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계소득의 경우, 소득수준 전반에 걸쳐 진보적인 경제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대북안보정책에서 보수인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진보적 경제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유권자의 추상적 사고 능력 등 인지적 능력을 보여주는 교육 수준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책영역 간 일관된 선호가 발견되었다. 이는 컨버스(Converse 1964; 2001)나 제이코비(Jacoby 1986; 1991)등의 연구자가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책영역 간 이념 선호의 일관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한 것이 한국 유권자들에게도 유효함을 보여주었다.

각 요인들이 상이한 정책 영역의 이념 선호 분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은 계층변수인 소득수준이었다. 대북안보정책에서 보수적인 정책 선호를 가진 경우 소득 하층이 진보적 경제정책 선호를 취할 가능성이 높으면서 정책이념 다변화를 이끌고 있었고, 대북안보정책에서 진보적 이념 선호를 가질 경우 경제정책에서 소득 하층과 상층의 이념 일관성이 두드러졌지만 소득 중간층이 경제정책에서 보수적 선호를 보이면서 이념 분화를 이끌고 있었다. 특히 대북안보정책에서 보수인 유권자들이 전체 유권자 중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했을 때 소득 하층과 소득 중층 이상의 이견 대립이 경제정책과 관련해 두드러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에서

의 이념 갈등의 특징으로서 지적되었던 저소득층의 보수 정책 선호, 보수 정당 지지라는 ‘계급 배반적’ 속성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종합하면, 한국 정치에서 최근 경제정책을 둘러싼 이념 갈등이 기존의 대북안보정책을 둘러싼 갈등만큼 중요해지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두 정책영역이 유권자들의 이념 공간을 구성하고 있었다. 두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가 중첩되지 않으면서 모든 정책 선호가 단차원의 진보-보수로 나타내기 어려운 다차원성을 보이고 있었다. 대북정책에서 보수적 입장을 가진 유권자들 사이에서 중도성향 유권자, 무당파 유권자가 다면적인 정책 선호를 이끌었지만 대북정책에서 진보적 입장을 가진 경우는 반드시 그렇지 않았다. 교육수준의 영향력도 모든 집단이 아니라 대북정책에서 진보적 입장을 가진 경우에만 유효했다. 정책영역 간 이념 분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은 소득수준일 가능성이 높았다.

다차원적인 이념 갈등에서 주관적 이념성향이나 정당이 유권자들에게 일관적인 이념 선호를 이끌도록 하는 단서가 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교육수준의 영향력도 제한적으로 나타나 유권자들의 정책 간 이념 선호의 비일관성을 이념적 무지라고 간주하기 어려웠다. 스나이더만(Sniderman 1993)의 주장처럼 정책 선호를 형성하는 요인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 부각되지 않았던 계층변수에 따라 경제정책선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이념선호 분화에 미치는 연령변수의 영향력이 미미했음을 고려했을 때 이제까지 한국 사회 이념 갈등이 반공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발견되었던 연령/세대 균열의 영향력이 새로운 쟁점 영역의 등장으로 약화되고 소득 균열이 중요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서 이용마(2014), 강원택(2013a), 장승진(2013) 등의 연구자들이 주목했던 계층 변수들의 영향력이 점차 강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유권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계층 갈등이 서구의 좌-우 계급 갈등과 반드시 유사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볼 순 없을 것이다. 한국과 서구의 산업구조, 고용구조와 직업문화의 차이는 계층 구분과 계층 간 예상되는 이해관계에서의 차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정책에서의 이념 갈등이 진행될 경우 한국 정치의 이념 갈등이 유권자들의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저소득층이 보수 정책이나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계급 배반적’ 속성이 약화되고 계층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정책 선호가 형성됨으로써 한국 정치에서 계층 정치가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강우진. 2013. 제 18 대 대선과 경제투표. 『한국정치학회보』, 47(5), 213-233.
- 강원택. 1998. 유권자의 이념적 성향과 투표행태.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I』, 서울: 푸른길.
- 강원택. 2003. 『한국의 선거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서울: 푸른길.
- 강원택. 2005. "한국의 이념 갈등과 진보·보수의 경계." 『한국정당학회보』 4권 2호: 193-217.
- 강원택 2009. "386 세대는 어디로 갔나?: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의 이념과 세대." 김민전 · 이내영 공편.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3: 패널조사를 통해 본 18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강원택. 2010. 『한국 선거정치의 변화와 지속: 이념, 이슈, 캠페인과 투표참여』, 서울: 나남.
- 강원택. 2011. "한국에서 정치 균열 구조의 역사적 기원: 립셋-룩칸 모델의 적용." 『한국과국제정치 (KWP)』, 27(3), 99-129.
- 강원택 2013a. "사회계층과 투표 선택." 박찬욱·강원택 편, 『2012년 대통령선거 분석』, 서울: 나남.
- 강원택. 2013b. "한국 선거에서의 '계급 배반 투표'와 사회 계층." 『한국정당학회보』, 12(3), 5-28.
- 강정인. 1998. "전환기에 선 남한의 보수주의." 『경제와사회』, 37,

98-117.

- 강정인 2009. “보수주의: 비동시성의 동시성 그리고 모호한 정상화.” 강정인·김수자·문지영·정승현·하상복 지음, 『한국 정치의 이념과 사상』, 서울: 후마니타스.
- 고원. 2012. “한국에서 복지정책의 지배적 정치담론화 과정 분석.” 『경제와사회』, 12-38.
- 김갑식. 2007. “한국사회 남남갈등: 기원, 전개과정 그리고 특성.” 『한국과 국제정치(KWP)』, 23(2), 31-59.
- 김윤실·윤종빈. 2014. “한국 유권자의 이념과 후보선택: 16, 17, 18 대 대선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26 (2), 119-141.
- 김재한. 1999. 한국의 이념성향과 선거정치. 『한국의 선거 III』, 조중빈 편. 서울: 나눔.
- 김주찬 · 윤성이. 2003.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이념성향이 투표에 미친 영향.”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3집 2호, 87-103.
- 노환희 송정민 강원택. 2013. “한국 선거에서의 세대 효과: 1997년부터 2012년까지의 대선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제12권 제1호, 113-140.
- 류재성. 2012. “중도 및 무당파 유권자 특성: 무태도 (non-attitudes) 인가 부정적 태도 (negativity) 인가?.” 『대한정치학회보』, 20(1), 101-127.
- 류재성. 2013. “정치이념의 정책선호 결정에 있어 정치지식의 역할.” 『한국정치연구』, 21(2), 53-86.
- 박경미 한정택 이지호. 2012.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구성적 특성.” 『한국정당학회보』, 11(3), 127-154.
- 박명호. 2003. “한국 유권자의 정치/사회적 균열구조에 대한 인식: 지역

- 이념 그리고 세대갈등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1 (단일호), 249-266.
- 박성복. 2011. “한국사회 정책갈등의 이념적 구조 분석논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2(2), 1-22.
- 박원호. 2012. “유권자의 정치이념과 정책선호, 그리고 후보자 선택.” 박찬욱 · 강원택 편, 『2012년 국회의원선거 분석』. 서울: 나남.
- 박원호. 2013. “정당일체감의 재구성.” 박찬욱 · 강원택 편, 『2012년 대통령선거 분석』. 서울: 나남.
- 박찬욱. 1993. “제 14 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의 정당지지 분석.”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 서울: 나남.
- 박찬욱 · 김경미 · 이승민. 2008.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이념 정향이 후보 선택에 미친 영향.” 박찬욱 편. 『17대 대통령선거를 분석한다.』, 서울: 생각의 나무.
- 선우현. 2002. “한국 사회에서 ‘진보/보수 간 이념적 대립 구도’의 왜곡화” 사회와 철학 연구회 편, 『진보와 보수』, 서울: 이학사.
- 손낙구. 2010. 『대한민국 정치사회 지도: 수도권 편』, 후마니타스.
- 손호철. 2011. “분단과 남북갈등 60년.” 『현대 한국정치: 이론, 역사, 현실 1945-2011』. 이매진, 128-168.
- 송호근. 2003. 『한국, 무슨 일 이 일어나고 있나: 세대, 그 갈등 과 조화의 미학』. 삼성경제연구소.
- 윤성이. 2006.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실체와 변화.” 『국가전략』, 12, 163-82.
- 윤성이·이민규. 2011. “연구논문: 한국사회 이념측정의 재구성.” 『의정연구』, 34 (단일호), 63-82.
- 이갑윤. 1998. 『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 서울: 오름.

- 이갑윤. 2011. 『한국인 의 투표 행태』. 후마니타스.
- 이갑윤 · 이현우. 2008. “이념투표의 영향력 분석: 이념의 구성, 측정 그리고 의미.” 『현대정치연구』 1권. 1호, 137-166.
- 이내영. 2009. “한국 유권자의 이념성향의 변화와 이념투표.” 『평화연구』 제17권 2호, pp.42-72.
- 이내영. 2010. “6· 2 지방선거와 세대균열의 부활.”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4』 . 179-200.
- 이내영·허석재. 2010. “합리적인 유권자인가, 합리화하는 유권자인가?.” 『한국정치학회보』 , 44(2), 45-67.
- 이용마. 2014. “2000 년대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계층균열 구조.” 『한국정당학회보』 , 13(3), 5-33.
- 이우영. 2003. “특집/이분법적 세계, 그 인식의 질서를 넘어: 체제수호적 통일과 반체제적 통일, 그 동일 구조를 넘어서.” 『당대비평』 , 205-216.
- 이재열. 2015. “사회의 질, 경쟁, 그리고 행복.” 『아시아리뷰』 , 4(2), 3-29.
- 이정복. 1992. “한국인의 투표행태: 제 14 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 26(3), 3113-3132.
- 이지호. 2009. “정당 위치와 유권자 정향.” 『현대정치연구』 2권. 1호, 123-149.
- 이현지. 2003. “한국인의 정치의식: 정치적 이념의 형성과 가치변화: 16 대 대선에 나타난 ‘비동시성의 동시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연구』 , 7(단일호), 125-148.
- 이현출. 2005. “한국 국민의 이념성향.”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2호, pp.321-343.

- 임성학. 2009. “한국의 선거와 이념: 정치사회와 유권자의 상호관계.” 『oughtopia』 24권. 2호, 37-67.
- 장승진. 2013a. “연구논문: 민주통합당은 좌클릭 때문에 패배하였는가? 제 18 대 대선에서의 이념투표.” 『의정연구』 39. 단일호: 73-98.
- 장승진. 2013b. “2012 년 양대 선거에서 나타난 계층균열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47(4), 51-70.
- 정구종. 2006. “16 대 대통령 선거 분석: 정치변동에서 사회변혁으로.” 어수영 편, 『한국의 선거 V: 제 16 대 대통령선거와 제 17 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오름.
- 정진민. 2003. “한국 사회의 이념성향과 정당체계의 재편성.” 『한국정당학회보』, 2(1), 95-118.
- 조성대. 2008. “균열구조와 정당체계.” 『현대정치연구』, 1(1), 169-198.
-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 함재봉. 2001. “한국의 이념적 갈등 구조와 그 역사.” 『계간 사상』, 겨울호, 7-22.
- 홍윤기. 2002. “민주적 공론장에서의 담론적 실천으로서 ‘진보-보수-관계’의 작동과 그 한국적 상황.” 사회와 철학 연구회 편, 『진보와 보수』. 서울: 이학사.

<국외 문헌>

- Arian, A., & Shamir, M. 1983. The primarily political functions of the left-right continuum. *Comparative Politics*, 139-158.
- Barton, A. H., & Parsons, R. W. 1977. Measuring belief system structure. *Public Opinion Quarterly*, 41(2), 159-180.

- Bishop, G. 2005. *The illusion of public opinion*.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 Brody, R. A., and Page, B. I. 1972. Comment: The assessment of policy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6(02), 450-458.
- Campbell, A., Converse, P., Miller, W., & Stokes, D. 1960. *The American voter*. Chicago: Wiley.
- Carmines, E. G., and Stimson, J. A. 1989. *Issue evolution: Race and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n polit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armines, E. G., Ensley, M. J., & Wagner, M. W. 2012. Political ideology in American politics: one, two, or none?. *In The Forum* (Vol. 10, No. 3).
- Conover, P. J. 1984. The influence of group identifications on political perception and evaluation. *The Journal of Politics*, 46(03), 760-785.
- Conover, P. J., and Feldman, S. 1981. The origin and meaning of liberal/ conservative self identific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5, 617 - 645.
- Converse, P. E. 1964.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in mass publics. In D. E. Apter (Ed.), *Ideology and discontent* (pp. 206 - 261). New York: Free Press
- Converse, P. E. 2000. Assessing the capacity of mass electorate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3, 331 - 353.
- Delli Carpini MX, Keeter S. 1996. *What Americans Know About Politics and Why It Matters*. New Haven, CT: Yale Univ.

Press

- Dennis, Jack. 1988. "Political Independence in America, Part 1: On Being an Independent Partisan Supporter."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8. No.1, 77-109.
-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 Ellis, C., and Stimson, J. A. 2012. *Ideology in Ameri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iorina, Morris P. 1981. *Retrospective Voting in American National Election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Gerring J. 1997. Ideology: a definitional analysi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0:957 - 94
- Hinich MJ, Munger MC. 1994. *Ideology and the Theory of Political Choice*. Ann Arbor: Univ. Mich. Press
- Inglehart, R. 1984. The changing structure of political cleavages in western society. *Electoral change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realignment or dealignment*, 25-69.
- Jacoby, William G. 1986. "Levels of conceptualization and reliance on the liberal-conservative continuum." *The Journal of Politics* 48.02, 423-432.
- Jacoby, W. G. 1995. The structure of ideological thinking in the American electorat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14-335.
- Jacoby, W. 1991. Ideological identification and issue attitud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5, 178 - 205.

- Jost John T. 2006. The end of the end of ideology. *American Psychology*. 61:651 - 70.
- Jost, John T., Christopher M. Federico, and Jaime L. Napier. 2009. "Political ideology: Its structure, functions, and elective affiniti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307-337.
- Kerlinger, F. N. 1984. *Liberalism and conservatism: The nature and structure of social attitudes*. Hillsdale, NJ: Erlbaum.
- Key, V. O. Jr. 1966. *The Responsible Electorate: Rationality in Presidential Voting 1936-1960*.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Klingemann, H. D. 1979. Measuring ideological conceptualizations. *Political action*, 215-254.
- Knight K. 2006. Transformations of the concept of ideology in the twentieth centur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0:619 - 26
- Knutsen O. 1995. Left-right materialist value orientations. In *The Impact of Values*, ed. JW van Deth, E Scarbrough, pp. 160 - 96. New York: Oxford Univ. Press
- Layman GC, Carsey TM. 2002. Party polarization and "conflict extension" in the American electorat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6:786 - 802
- Levitin, Teresa E., and Warren E. Miller. 1979. "Ideological interpretations of presidential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73, pp.751-771.
- Lewis-Beck, Michael S., William G. Jacoby, Helmut Norpoth, and Herbert F. Weisberg. 2008. *The American Voter Revisited*.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Lipset, Seymour M. and Stein Rokkan. 1967, "Cleavage Structures,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An Introduction," Seymour M. Lipset and Stein Rokkan (eds.),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Cross-National Perspectives*. New York: Macmillan: 1-64.
- Lodge, M., & Hamill, R. 1986. A partisan schema for political information process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02), 505-519.
- Luskin, Robert C. 1987. "Measuring political sophistic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987): 856-899.
- Luttbeg, N. R. 1968. The structure of beliefs among leaders and the public. *Public Opinion Quarterly*, 32(3), 398-409.
- Middendorp, C. P. 1992. Left-Right Self-identification and (Post) materialism in the Ideological Space; their Effect on the Vote in the Netherlands. *Electoral Studies*, 11(3), 249-260.
- Nie, Norman H., & Kristi Andersen. 1974. "The Belief Systems Revisited: Political Change and Attitude Structure." *The Journal of Politics*, vol.36, No.3, pp.540-591.
- Page, B. I., and Jones, C. C. 1979. Reciprocal effects of policy preferences, party loyalties and the vo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3(04), 1071-1089.
- Peffley, M. A., and Hurwitz, J. 1985. A hierarchical model of attitude constrain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9, 871 - 890.
- Pierce, J. C. 1970. Party identification and the changing role of

- ideology in American politics. *Midwest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5-42.
- Pierce, Patrick A. 1993. "Political sophistication and the use of candidate traits in candidate evaluation." *Political psychology* : 21-35.
- Rahn W. 1993. The role of partisan stereotypes in information processing about political candidat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7:472 - 96
- Shafer, B. E., and Claggett, W. J. 1995. *The two majorities: The issue context of modern American politics*. JHU Press.
- Sinderman, P. M. 1993. *The new look in public opinion research*.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 Sullivan, J. L., Piereson, J. E., & Marcus, G. E. 1978. Ideological constraint in the mass public: A methodological critique and some new finding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33-249.
- Sundquist, J. L. 1983. *Dynamics of the party system*. Brookings Institute.
- Treier, Shawn, and D. Sunshine Hillygus. 2009. "The Nature of Political Ideology in the Contemporary Electorate. *The Public Opinion Quarterly*, No.73, No.4, pp.679-703.
- Zaller J. 1992. *The Nature and Origins of Mass Opinion*.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Abstract

Multi-dimensional Ideological Attitudes

of Korean Voters:

Factors that affect economic policy preferences

Yae-jin, Sung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investigates political and socioeconomic factors that can shape ideological preferences across political and economic policies. Based on the 2012 post-presidential election survey, voters can b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according to attitudes on the two policy dimensions: political conservative-economic liberal, political conservative-economic conservative, political liberal-economic liberal, and political liberal-economic conservative. Five factors including voters' self-reported placement on liberal-conservative continuum, party identification, age, income, and education level are analyzed to determine whether they have effects on the preferences between the groups. Cross-tabulation analysis and binary logistic regression are performed.

The results showed that self-placement ideology, party identification, income and education can create links between the two policy domains. Voters who identified themselves as moderates and partisan independents were likely to form different issue attitudes between political and economic dimensions of ideology. Income strata are positively interrelated with economic conservatism, but politically liberal voters with the highest incomes maintained liberal perspectives on economic policies. As an indirect measure of cognitive abilities, formal education can intensify consistent ideological preferences between distinct policies.

With the other variables controlled, income level as a class variable functioned as a major factor that can connect or disconnect multi-dimensional policy attitudes. Politically conservative voters with the lowest incomes tend to hold liberal economic preferences. Political liberals with the lowest incomes are likely to maintain consistent preferences on the economic dimension, but middle-income voters can be more conservative about economic issue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f economic ideological conflicts become more acute, policy conflicts will increasingly reflect voters' class statuses. Age cohorts have been considered as a dominant variable in Korean ideological competition, but the current political environment where economic issues are a new ideological agenda can make income cleavage a more decisive factor for policy attitudes.

keywords : political ideology, policy attitudes, ideological consistency, economic policy, class conflict

Student Number : 2013-22879